

대한민국진영 시국특별대토론회

민노총의 귀족노조, 그 실태와 대안

일시 | 2019. 6. 20(목) 14:00~18:0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주최 | 대한민국진영 시민사회단체 ·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미디어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전략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기업원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트루스포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反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나라지키기교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민초대통합연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자유대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자유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과정의를추구하는국민연합 6.25전사자유자녀회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개 회 축 사 14:00~14:20	국민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국민의례
	격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관용 前국회의장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축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前전태일재단 이사장 ·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 前민노당 정책위의장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국특별 대토론회 14:20~18:00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 경제와 노조, 그 상생의 길” 최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노총의 귀족노조는 노동자의 대변인이 아니다” 조형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사 례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노총 귀족노조의 법치 파괴” 도태우 변호사,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착취”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청년 일자리 가로막는 민노총 귀족노조” 김동근 청사진 운영위원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 	

[목 차]

격려사

- 박관용 대한민국의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 前 국회의장 7

축사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 前 전태일재단 이사장 9
-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공화공동의장 / 前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11

인사말

-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3

발제

- 자본주의 경제와 노조, 그 상생의 길?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 ----- 17
- 노동조합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27
- 민노총의 귀족노조는 노동자의 대변인이 아니다
조형곤 대한민국의수호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 59

사례 발표

- 민노총 귀족노조의 법치 파괴
도태우 변호사 /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75
-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 착취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102
- 청년 일자리 가로막는 민노총 귀족노조
김동근 청사진 운영위원 ----- 107

토론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 113
-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 ----- 115

격 려 사

박 관 용

前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산업화의 위대한 성과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의 숨은 노력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열악한 임금조건과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달성이라는 애국심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노력이 큰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하고, 노동의 건전한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민노총은 과연 어떠합니까?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건전한 정신과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소득양극화와 임금격차를 악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기업의 신규 채용과 청년의 일자리 고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귀족노조는 노동자를 진심으로 대변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 권력집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치를 무시하고 불법도 불사합니다. 공동체정신에 기반을 둔 노사협치가 아닌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문제는 이미 거대 국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민노총 귀족노조의 횡포와 포악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번 토론회는 작지 않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다망에도 귀한 발제를 맡아주신 좌승희 이사장, 김대호 소장, 조형근 집행위원, 도태우 변호사, 이덕로 이사장, 김동근 운영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한 김원식 교수와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노동의 현장에서 그 가치와 정신을 몸소 실천하려고 헌신했던 장기표 월장과 주대환 의장의 축사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의 노고를 맡아주신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서 대동단결하여 공동주최로 참여해주신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회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의 한 축을 맡은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세연 국회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입법 및 정책 차원에서 민노총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민주노총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이 문제다

장 기 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前 전태일재단 이사장

민주노총의 횡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기득권층이 되었음에도 자기들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악착같이 투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로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니와 민주노총의 해고 반대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청년실업이 늘어나는가 하면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는데도 민주노총은 이를 모른체한다. 무엇보다 기업인들이 민주노총 때문에 기업 하지 못하겠다며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폐업하고 있으니, 망국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침체의 중요한 요인이 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도 민주노총 때문이거니와 주52시간근로제의 무리한 채택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기간 확대를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가 합의해놓고서도 민주노총의 반대로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가 민주노총이 온갖 이권에 개입하는가 하면 공권력을 무력화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강력한 최고의 권력집단이 되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노동자를 피압박민중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세계관도 문제지만,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것이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문재인 정권의 민주노총 옹호가 근본적 문제다. 더욱이 민주노총도 문재인 정권도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강남좌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일 뿐이다.

한마디로 저임금 내지 실업상태의 빈곤층이야 어려움을 겪든 말든,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든 말든 정권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생각으로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을 응징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망국적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민주노총을 옹호할 수 없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상관없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5% 미만이어서 노동자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민주노총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민주노총의 부당한 횡포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민주노총 옹호를 대중적으로 규탄하는 일이 힘차게 일어나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 많은 단체들이 연대하여 민주노총의 망국적 행태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로잡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이 토론회가 민주노총의 횡포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 사

주 대 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
前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장기표 선배가 말씀하시면 충분한데 제가 더 보탬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에 태어난 청년들에게는 미안하고 무책임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노총이 원래 이런 괴물이 되라고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노동운동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사이에 이제 누군가의 기득권을 지키고, 불평등을 유지 확대시키는 반동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치의 공간을 흔들고,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낱알이 고발, 비판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귀족노조’라는 말보다는 ‘기득권노조’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세계노동운동사에서 ‘노동귀족’은 들어보았지만, ‘귀족노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귀족’이라는 말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권력과 돈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심한 말로 공격하면 내 기분은 좋지만 동네 사람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는 데는 정확한 말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보다는 ‘조합원’의 단기적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원래 추구해야 할 ‘평등’ 가치를 잃어버리다보니 근래에 반일 민족주의에서 알리바이를 찾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런 일입니다. 이런 문제도 다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놓은 괴물을 죽이든지 우리에게 가두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전망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노동운동이 등장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조직의 형태나 운동의 방식이 반드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노동운동일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다음 세대의 노동운동이 어디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뜻 깊은 토론의 자리를 만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 사 말

김 세 연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부산금정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세연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진영 시국특별대토론회, 「민주노총 귀족노조, 그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제도적 보호와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탄생하였으며,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용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와 33조를 비롯하여 노동 3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무용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노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소불위의 배타적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노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전체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민주노총의 법치 파괴와 사회질서 파괴 행위는 시민들에 의해 전혀 동의 받지 못함은 물론, 공동체 유지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은 국회에 진입하려다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였고, 법원의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주주총회장을 점거하였으며, 자신들의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몸싸움을 일삼고 고용세습을 요구하기도 했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적폐'로 규정한다거나 부동산 임대료 인하 및 기간산업 국유화를 주장하는 등 노동조합과 아무 상관없는 정책까지 개입하려 하는 등 월권의 정도가 점입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7월 총파업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민주노총 공화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에서 벗어나 불법과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주노총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방조 책임을 묻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하되,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노총의 존재 자체를 비롯하여 분출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노동조합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진영 시국특별대토론회〉
민노총의 귀족노조, 그 실태와 대안

발 제

- 좌 승 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
-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조 형 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자본주의 경제와 노조 그 상생의 길?

2019. 6. 20.

좌승희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

목 차

1. 자본주의의 본질
2. 노조의 이념과 자본주의
3. 역사적 경험과 진실: 흥하는 기업이
없이 동반, 포용성장은 없다.
4. 공산, 사회주의 국가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5. 한국에 대한 교훈

1. 자본주의의 본질

<칼 마르크스(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사회 →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
- 자본주의를 1+1=2로 보는 정태적, 선형적 사고: 마차 10 → 100개
- 자본주의는 모순된 체제: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투쟁으로 불평등 초래
- 기업은 불평등의 원천: 노동자 혁명으로 기업을 청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체제전환하자

<좌승희(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선언문,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Capitalist Manifesto, 2017, Edward Elgar (England-USA))

- 자본주의는 차이, 차등 속에서 모두를 흥하는 사람으로 이끈다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흥한다**
- 자본주의는 시너지(1+1>2)창출(비선형적 상호작용)로 마차 → 기차 → 자동차 → 비행기 → 우주선으로 창발하는 사회: 기업의 성장이 자본주의 발전을 견인 →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
- 불평등 속에서 모두 흥하는 동반, 포용적 성장이 자본주의의 본질
- 결과든 기회든 평등을 보장하는 순간부터 자본주의경제는 몰락을 자초
- **Gresham의 법칙 → 평등한 사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차이, 차등, 불평등을 허용하는 사회만이 양화를 보존할 수 있다.**
- 법 앞의 평등만이 자본주의 경제의 번영을 담보한다.

2. 노조의 이념과 자본주의

-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사회? : 사실상은 같아지지 않지 만 모두 발전하는 사회
-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 한다? : 사실상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무임승차하여 흥한다.
- 기업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천? : 기업은 불평등을 앞세워 모두를 흥하는 자로 만드는 경제조직
- 경제적 결과의 평등을 위해 기업과 투쟁하는 것이 노조의 목적? : 결국 모두가 망하는 사회를 피하지 못한다.
⇒ 노조가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경도되면 경제에 독이 된다. → 올바른 자본주의 이념(노조+자본>2)만이 노조와 자본주의 모두를 살린다.
⇒ 노조는 자본주의 제도인가?

3. 역사적 경험과 진실: 흥하는 기업이 없 동반, 포용성장은 없다.

- 농경사회와 자본주의사회 모두 시장경제라는 보편체제이지만 자본주의만이 주식회사(기업)라는 사회적 기술을 발명하여 인류역사에 최초의 경제발전현상을 창출
- 자본주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시장경제라기보다 보이는 손인 기업이 이끄는 **기업경제**
- 산업혁명은 주식회사(기업)라는 사회적 기술이 일으킨 혁명
- 박정희 세계최고의 동반성장경험은 기업성장을 통한 혁명
- 기업은 농토를 대체한 인간의 삶의 터전: 기업이 없으면 모두 농경사회로 역주행한다.
- **기업이라는 경제적 조직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고 자본이 많고 인력이 많아도 경제번영을 이룰 수는 없다.**
=> **강한,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생태계를 보유한 국가가 가장 부강한 경제와 동반, 포용성장을 실현**

4. 공산, 사회주의 국가는 왜 멸망할 수 밖에 없었나?

- 자본주의경제에서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자본주의적 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
- 결과 1: 기업이라는 장치가 사라진 모든 사회주의권 경제가 농경사회로 역 주행. 사회주의경제몰락은 제조기업의 몰락 과정
- 결과 2: 체제전환국 중 오직 한국의 기업부국혁명을 무임승차한 중국만이 예외적으로 산업혁명 진행 중
- 결과 3: 중국은 포춘 500대기업의 2대 (2018년 현재 미국 126개, 중국 120개) 보유국이지만 러시아는 제조업은 없이 가스, 오일 등 자원회사 4개로 아직도 농경사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 노동자혁명으로 기업을 청산, 국유화하여 자본주의 기업을 없애고 공산당이 임금의 획일적 평등을 내걸고 경영한 공장은 모두 몰락하고 농경사회로 역 주행.

5. 한국에 대한 교훈(1)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

- 가장 사회주의적인 이념인 빈곤극복과 동반 포용성장을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기업부국)으로 성공.
-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농경사회 이념을 탈피하여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자본주의이념으로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하여 경제 번영을 이루었다.**
- 평등은 없다.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는, 신상필벌의 정의로운 정책을 앞세워 모두를 스스로 돕는 자로 바뀌었으므로, 흥하는 이웃을 양산하여 인류역사에 금자탑을 쌓았다.
- 성과 높은 새마을과 수출성과 우수 중소기업을 더 지원 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모든 마을을 일으켜 세우고 대기업을 육성했다.

5. 한국에 대한 교훈(2)

<문정부에 대한 교훈>

- 기업의 성장이 불평등, 불균형, 나아가 불평등의 원천이라고, 노조를 앞세워 대기업청산에 나서고 있는 문정부는 사회주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정책의 끝은 산업혁명의 부정이며, 농경사회로의 역주행이 될 것이다.

- **한국경제 저성장과 소득분배악화 문제의 해법:**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성과중심 지원정책으로 바꿔 10-20개의 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대기업들을 더 많이 키워내면 중산층이 더 두꺼워져 저성장과 분배악화문제 해결된다. 지금의 대기업청산정책은 하책중의 하책.

<노조에 대한 교훈>

- 기업은 노조의 sweet home이다. 기업이 없이는 노조가 설 땅도 없다. 농토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 노조도,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대접받아야 한다는 동서고금의 보편적 정의를 수용하여 "사회주의"이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사회의 발전에 동참하여야 한다.

5. 한국에 대한 교훈(3)

<기업에 대한 교훈>

-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최종적인 부가가치창출 주체로서 노동과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자본+노동+기술의 합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기술이다.(1+1+1>3)
 - 따라서 기업과 기업인이 자본주의 번영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길은 기술자, 근로자, 자본가를 하늘같이 받들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윤은 바로 이 책임을 다 한데 대한 사회의 보답이다.
- ⇒ 기업인들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공정한 보상’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여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양극화

2019.6.20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산업대분류별 소득 및 평균 연령·근속기간(만원, 세)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통계청, 2019.1.29)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연령	평균근속기간	일자리개수(만개)
계	287	210	43.1	4.5	1937.6
농업, 임업 및 어업	203	154	46	1.9	7.6
광업	368	332	51.1	6.7	1.3
제조업	366	288	41.5	5.3	438.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15	591	41.9	11.7	7.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298	260	48.1	4.8	9.7
건설업	239	180	47.2	1.9	185.6
도매 및 소매업	238	179	40.6	2.9	199.6
운수 및 창고업	286	230	46.9	5.3	71.2
숙박 및 음식점업	122	95	39.2	1.4	84.1
정보통신업	388	308	37.6	4.6	64.2
금융 및 보험업	612	517	41.8	8.6	95.6
부동산업	229	179	52.5	2.9	4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4	249	40.6	3.8	80.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7	160	46.5	2	14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71	363	42.9	10.7	120.1
교육 서비스업	366	312	41.8	8.1	13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1	156	44.3	2.7	18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6	176	38.9	3.6	14.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3	146	46.5	3.2	40.6
국제 및 외국기관	388	381	48.1	14.7	1.4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은행원 평균 연봉비율(%) **외환위기 이후구조조정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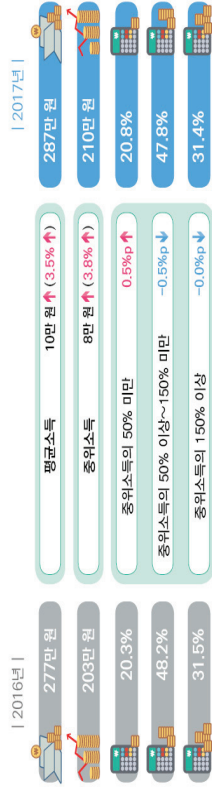
중국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대만	호주	미국
214%	203%	183%	173%	170%	152%	146%	134%	115%	101%

*1인당GDP는 2014년기준. 은행원 평균연봉은 국가별자료입수 시기에 따라 일부는 2013년 또는 2015년 기준. 자료: 조선일보(2015.09.10), "은행원 연봉, 1인 GDP 대비 美보다 2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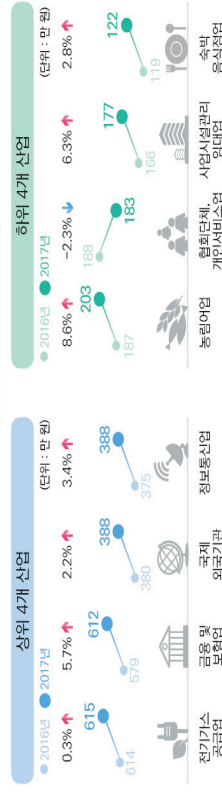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통계청(2019.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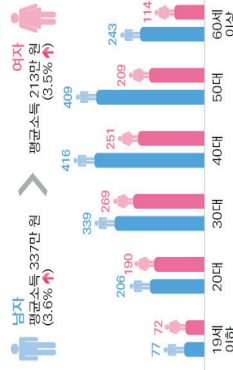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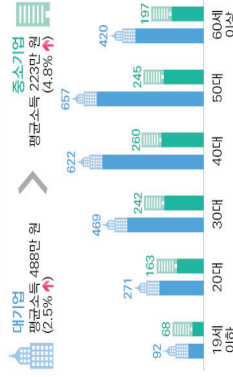
산업분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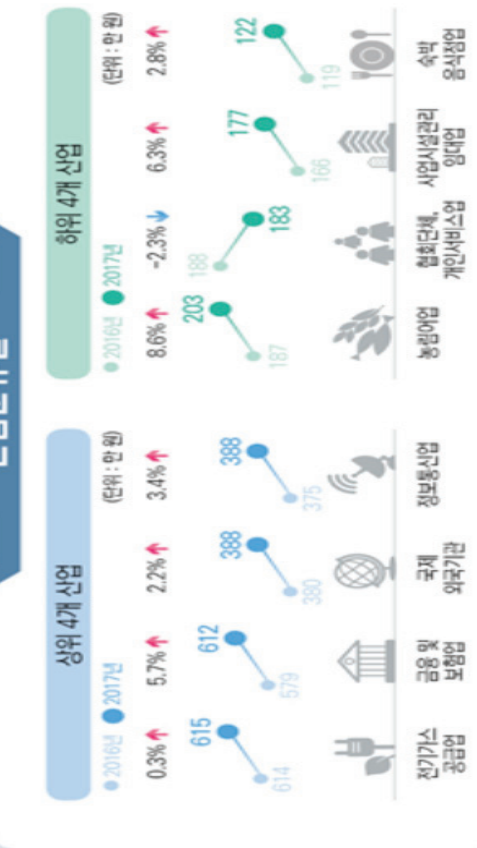
성·연령별



기업규모·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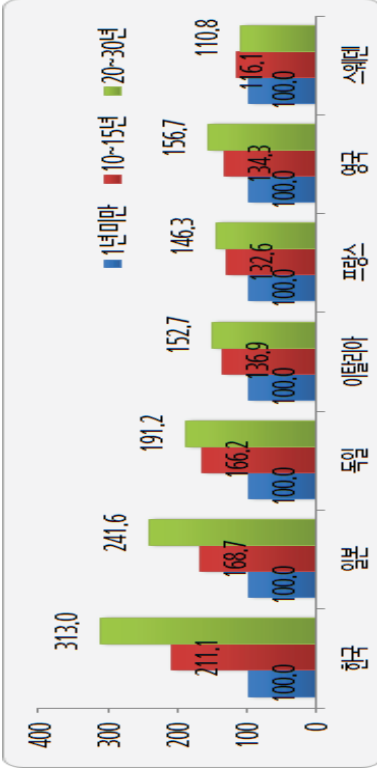


산업분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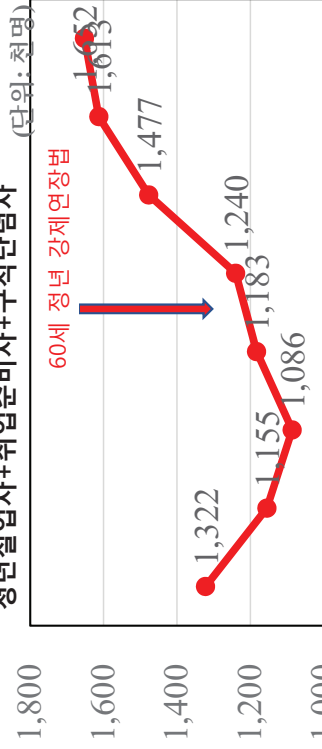
5위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371만원
6위 제조업&교육서비스 366만원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제조업)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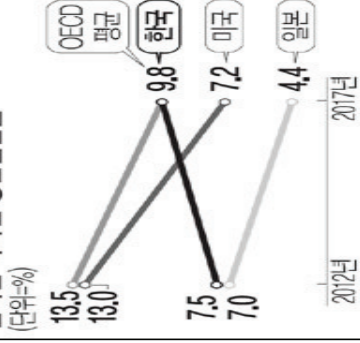
주: 한국 및 일본은 초과근여 제의 월임금중액, 유럽은 월임금중액 출처: 김동배, 2013. 10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임금직무 혁신 토론회

청년실업자+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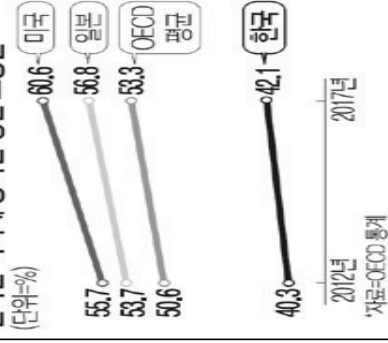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만 악화된 청년실업률



한국만 더디게 증가한 청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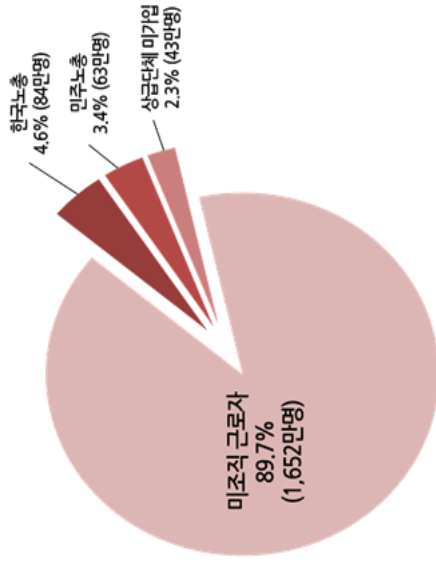
<표 II-12> 연령계층별 고용률: 2016년
(Employment=Population Ratios by Age in 2016)

연령	한국 (Korea)	덴마크 (Denmark)	프랑스 (France)	독일 (Germany)	이탈리아 (Italy)
전체	66.1	74.9	64.6	74.7	57.2
15-24세	26.9	58.2	28.2	45.8	16.6
25-54세	76.2	82.5	80.3	84.0	68.8
55-64세	66.2	67.8	49.9	68.6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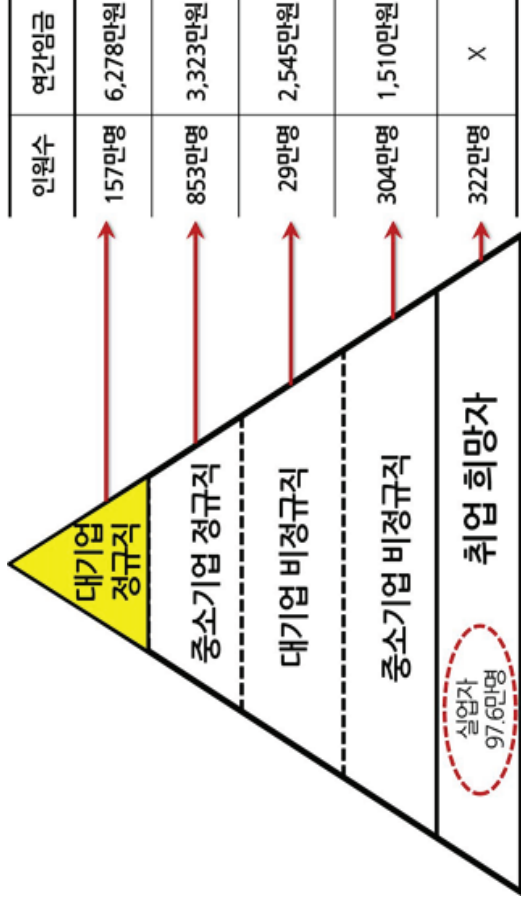
연령	일본 (Japan)	스페인 (Spain)	영국 (U.K.)	미국 (U.S.A.)
전체	74.3	60.5	74.3	69.4
15-24세	42.5	20.5	53.7	49.4
25-54세	83.3	71.5	83.0	77.9
55-64세	71.4	49.1	63.5	61.8

주: 전체 고용률은 15-64세 기준임. 단, 스페인, 미국, 미국의 경우는 16-64세임.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고용형태별 인원 및 연간임금



주 : 취업희망자는 "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로 체감실업자 개념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고용노동부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대기업& 유노조&정규직	중소기업& 무노조&비정규직	전체 평균
월평균임금(만원)	392	134.5	223.4
근속년수	13.4	2.3	5.6
신규채용률	6.2%	54.4%	31.3%
국민연금 가입률	99.5%	34.2%	68.4%
건강보험 가입률	99.8%	40.9%	71.8%
퇴직금 적용률	99.6%	36.4%	68.9%
상여금 적용률	99.1%	36.6%	70.4%
근로자수(천명)/비중	1,353(7.4%)	4,852(26.4%)	18,397(100%)

한국 노동시장의 부문별 차이

허재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2014.11

한국 자동차 5사와 주요 경쟁사의 임금 및 생산성 비교

	한국 자동차5사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비고
임금(연봉)	9072만원	8391만원 (832만엔)	8303만원 (65,051유로)	
*1인당 GDP(2017년)	29,744달러	38,428달러	44,470달러	
1인당 GDP대비 연봉(2017년)	2.85배	2.04배	1.74배	1달러=1070.5원
매출액 대비 인건비(2017년)	12.3%	5.8%	9.9%	
대당조립시간(HPV)(2015년)	26.8시간	24.1시간	23.4시간	
매출액대비 R&D지출 비중	2.8%	3.6%	5.7%	

파업성향

현대차 노조 → 1987년 설립 이후 1994년, 2009~2011년의 4년을 제외하고 32년간 매년 파업.
 기아차 노조 → 1991년부터 2017년 까지 27년 중 25년 동안 매년 파업.
 그러나 도요타는 1962년 무파업 선언 이후 56년째 무파업(2003년부터 4년간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 선언)

박태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노동경제학 전공. 1987년 산업연구원(KIET)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노조결성 주도. 이후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현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 상임공동대표.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정책실 노동개혁 TF 팀장(비서관). 2000년대 중반 이래는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관여.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을 위한 「노사전문위원회」(2006~2008년)와 「노사전문위원회」(2011~2012년) 대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광주 인근 공단(빛그린산단)에 7,00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0만 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SUV(스포츠헤용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주44시간 기준 연 3500만원의 초임을 받는 근로자 수천 명을 채용. 정상계도에 올라가면 고용 효과는 1만~1만2천명 예상

현대차노조 성명(2018.11.1)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과잉중복투자”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으로 인해 임금이 하향평준화”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시설이 남아도는 판에 과잉중복투자로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또 지역형 일자리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부활로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임금은 하향평준화 되어 경제파탄을 불러올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 해왔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은 현대차 재벌의 약점을 잡아 기어이 굴복시켜 도장을 찍게 만들고.....문재인정권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은 박근혜보다 더 나쁜 일자리를 만들기에....재앙적인 경제파탄을 저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금속노조 성명 “한국노총을 제외한 노동계도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한 자동차 산업의 중복·과잉투자 정책” “낮은 임금의 일자리와 생산성을 맞바꾸겠다는 구상” “끔찍한 반사회적 발상”

“어떻게 공무원의 머리에서 5년간 임단협 교섭 일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3권이 부정당한 공장장은 바로 자본가들이 꿈꾸던 ‘낙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지난 대선 기간 분명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금 똑같은 현대자동차의 로고를 달고 나오는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을 차등하겠다는 발상에 청와대는 제동을 걸기는커녕 후견인이 되어 반대한 지자체를 압박하고,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민주노총 성명 “지속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에 5천억 공적자금투입, 누가 책임질 것인가”(12월4일 <http://nodong.org/7250926>)

“애초 광주형 일자리는 얼마나 더 나쁜 노동조건 모델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임금의 하한선이 아니라 법에도 없는 임금 상한선을 놓고 협상을 했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상 최대 5년간 유예와 같은 초법적 노동3권 무력화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또한 광주시가 세금으로 주택, 교육지원 등을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이 광주형 일자리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총략)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외주공장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서산 동희오토 모델이고, 시장은 포화상태인데 광주에는 새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중복투자 출혈경쟁 모델일 뿐이다.(총략)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략적인 광주형 일자리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재벌대기업과 각 계열사들에게 신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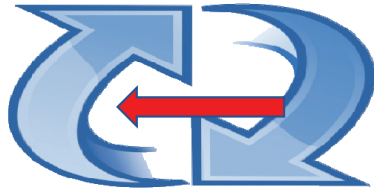
임금의 4 요소

생산성(정상 이득)		지대(초과 이득)
개인 (노동)	숙련(기술), 태도, 직무, 학력, 성 등	노사 역학(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숙련형성 전략과 고용임금 문화/관습(연공임금, 숙지주의 등)
집단 (부문/산업/기업) & 기술	산업/기업의 생산성(국제경쟁력, 브랜드)	국가표준, 국가규제, 진입장벽, 시장역학(소비자, 협력업체, 경쟁업체와 관계 → 독과점, 갑질 등)

이윤(이자), 임금, 지대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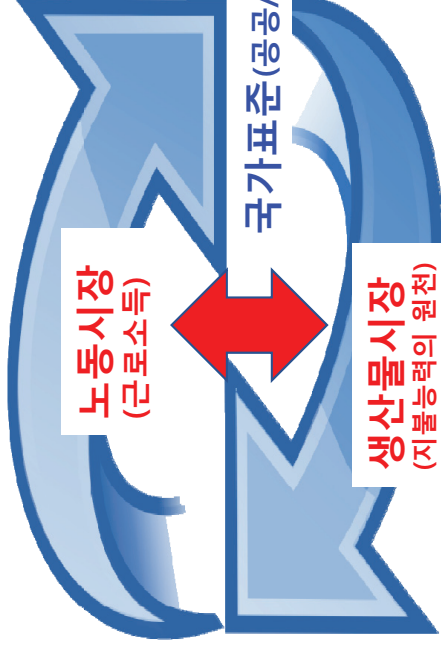
자본/집단	자연& 부동산	국가권력(규제, 표준, 갑질)	시장(불완전경쟁=불균형) *독과점, 갑질, 교섭력	브랜드& 기술
노동/개인	문화/관습=가족주의(무임승차, 내외 차별), 연공주의, 쟁취·약탈주의 → 노조 조직 형태와 행태			

재산소득



부동산(자산)시장

노동시장
(근로소득)



국가표준(공공/노동/진보) + 법령

생산물시장
(지불능력의 원천)

제 몫, 제 값, 제 권한,
제 책임, 제 권리,
제 자리 개념의 실증
→ 쟁취, 약탈 만능주의

고비용 구조(부동산/교육)
과소비(허영), 고도성장 경험
담론과 언론

통계표명 : 공무원 보수 추이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민간임금점수율	84.4	85.2	83.7	84.5	84.3	83.4	83.2	86.0	85.2
공무원처우개선율	0.0	5.1	3.5	2.8	1.7	3.8	3.0	3.5	2.6

출처 : 인사혁신처 「민간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

[지표 설명] ■ 공무원 보수 민간임금점수를 개념

- 비교대상 민간임금: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의 보수**(매년 6월 보수 기준)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

규모별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2017년)							임시 및 일용근로자
	사업체수	총종사자수	자영업자	무급가족및기타종사자	상용근로자	100인 미만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전규모	2,017,707	17,736,224	1,253,671	1,218,045	12,641,647	2,622,861	663,737	
1~4인	1,253,681	3,390,187	894,840	273,551	1,558,059	663,737	663,737	
5~9인	461,609	2,955,493	282,304	125,221	1,979,334	568,634	568,634	
10~29인	222,693	3,461,415	67,284	254,990	2,709,427	429,714	429,714	
30~49인	38,875	1,456,281	5,320	204,024	1,082,160	164,777	164,777	
50~99인	24,370	1,652,195	2,853	161,679	1,309,759	177,904	177,904	
100~199인	10,230	1,384,900	864	96,407	1,124,660	162,969	162,969	
200~299인	2,815	678,386	145	35,063	553,005	90,173	90,173	
300~499인	1,803	681,230	52	32,789	544,553	103,836	103,836	
500~999인	1,052	718,057	8	20,076	581,306	116,667	116,667	
1000인 이상	579	1,358,080	1	14,245	1,199,384	144,450	144,450	
100인 이상계	16,479	4,820,653	1,070	198,580	4,002,908	618,095	618,09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대한민국 평균 공무원 (2015년 12월 31일 기준)

공무원 수 **1,026,201** 명
(남자 56만 9661 명, 여자 45만 7540 명)

평균 연령 **42.2** 세
진체 공무원 평균 연봉 **5892** 만원

평균 자녀 **2** 명
최연소·최고령 **18** 81 세

평균 재직기간 **15.7** 년
월평균 초과근무 **25.1** 시간

平成28年(2016년) 4월 1일現在の人員は253,624人、平均年齢43.3歳、平均給与月額(俸給及び諸手当の合計)は417,394円であつた

職員数、平均年齢、平均経験年数及び平均給与月額

俸給表	職員数	平均年齢	平均経験年数	平均給与月額	俸給	地域手当等	俸給の特別調整額	扶養手当	住居手当	その他
	人	歳	年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全俸給表	253,624	43.3	21.7	417,394	341,323	40,909	11,657	11,409	5,058	7,038
行政職俸給表	140,786	43.6	22.0	410,984	331,816	41,583	12,316	11,387	5,471	8,411
行政職俸給表(一)	2,876	50.4	29.8	329,358	287,447	25,136		11,400	3,787	1,588
専門行政職俸給表	7,594	42.0	19.7	442,036	349,008	51,251	12,591	10,867	7,998	10,321
税務職俸給表	50,925	43.3	22.2	442,569	366,926	44,380	13,604	10,904	4,380	2,375
公安職俸給表	22,082	41.3	20.0	371,411	315,764	29,288	5,686	13,313	2,614	4,746
公安職俸給表(一)	22,652	41.1	19.5	406,808	341,550	31,316	9,336	12,002	5,741	6,863
海事職俸給表	178	45.2	23.6	469,676	375,561	52,342	13,761	16,646	4,726	6,640
海事職俸給表(一)	295	41.9	23.0	385,710	316,451	43,862		13,451	5,220	6,726
教育職俸給表	80	45.9	21.8	471,916	425,810	19,154	5,077	16,063	5,063	749
教育職俸給表(一)	82	48.5	24.2	459,780	397,117	37,532	3,154	11,835	6,289	3,853
研究職俸給表	1,419	45.9	22.5	557,131	400,779	76,154	55,851	11,633	7,439	5,275
医療職俸給表	532	51.1	24.3	836,386	496,997	87,427	22,699	12,576	5,590	211,097
医療職俸給表(一)	458	45.5	20.4	352,319	308,263	22,738	1,395	8,920	5,906	5,097
医療職俸給表(二)	1,787	46.9	21.7	346,820	314,264	17,082	607	7,125	4,893	2,849
福祉職俸給表	243	42.4	18.5	379,832	330,211	27,379	4,171	10,041	5,541	2,489
専門スタッフ職俸給表	198	55.3	32.2	598,047	486,969	95,460		12,672	2,182	764
指定職俸給表	898	56.5	33.1	1,030,184	861,354	163,055				5,775
特定任期付職員俸給表	456	42.8		618,949	521,985	96,461				503
第一号任期付研究員俸給表	21	41.3		478,943	408,952	69,991				
第二号任期付研究員俸給表	62	33.5		393,739	335,371	58,368				

第1表 性別賃金、対前年増減率及び男女間賃金格差の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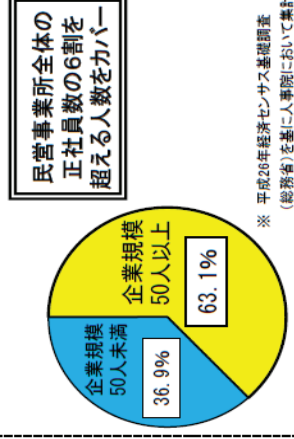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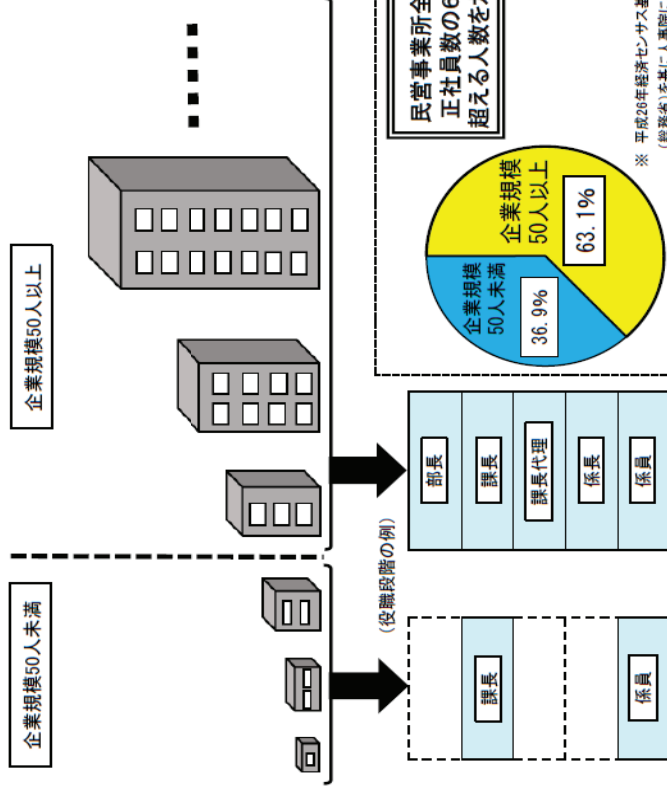
年	男女計		男		女		男女間賃金格差(男=100)
	賃金(千円)	対前年増減率(%)	賃金(千円)	対前年増減率(%)	賃金(千円)	対前年増減率(%)	
平成9年	298.9	1.1	337.0	0.9	212.7	1.5	63.1
10	299.1	0.1	336.4	-0.2	214.9	1.0	63.9
11	300.6	0.5	336.7	0.1	217.5	1.2	64.6
12	302.2	0.5	336.8	0.0	220.6	1.4	65.5
13	305.8	1.2	340.7	1.2	222.4	0.8	65.3
14	302.6	-1.0	336.2	-1.3	223.6	0.5	66.5
15	302.1	-0.2	335.5	-0.2	224.2	0.3	66.8
16	301.6	-0.2	333.9	-0.5	225.6	0.6	67.6
17	302.0	0.1	337.8	1.2	222.5	-1.4	65.9
18	301.8	-0.1	337.7	0.0	222.6	0.0	65.9
19	301.1	-0.2	336.7	-0.3	225.2	1.2	66.9
20	299.1	-0.7	333.7	-0.9	226.1	0.4	67.8
21	294.5	-1.5	326.8	-2.1	228.0	0.8	69.8
22	296.2	0.6	328.3	0.5	227.6	-0.2	69.3
23	296.8	0.2	328.3	0.0	231.9	1.9	70.6
24	297.7	0.3	329.0	0.2	233.1	0.5	70.9
25	295.7	-0.7	326.0	-0.9	232.6	-0.2	71.3
26	299.6	1.3	329.6	1.1	238.0	2.3	72.2
27	304.0	1.5	335.1	1.7	242.0	1.7	72.2
28	304.0	0.0	335.2	0.0	244.6	1.1	73.0
平成28年	42.2		43.0		40.7		
勤続年数(年)	11.9		13.3		9.3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z2016/dl/01.pdf>

③ 民間給与との比較

調査対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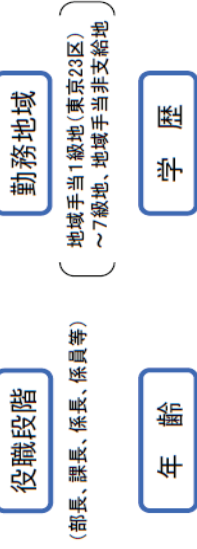
- 企業規模50人以上の多くの民間企業においては、公務と同様、課長・係長等の役職段階があることから、同種・同等の者同士による比較が可能
- 現行の調査対象であれば、実地による精緻な調査が可能



比較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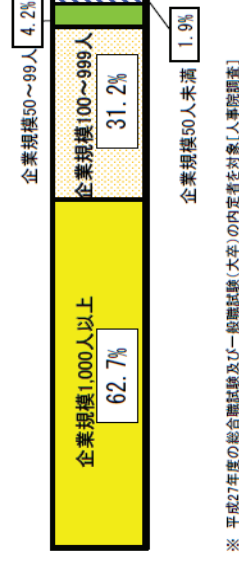
- 民間給与との比較は、主な給与決定要素を同じくする者同士で比較する必要
- ※ 国家公務員の人員数のウェイトを用いたラスバイレス比較

<主な給与決定要素>



※ 詳細は④ 民間給与との比較方法(ラスバイレス比較)を参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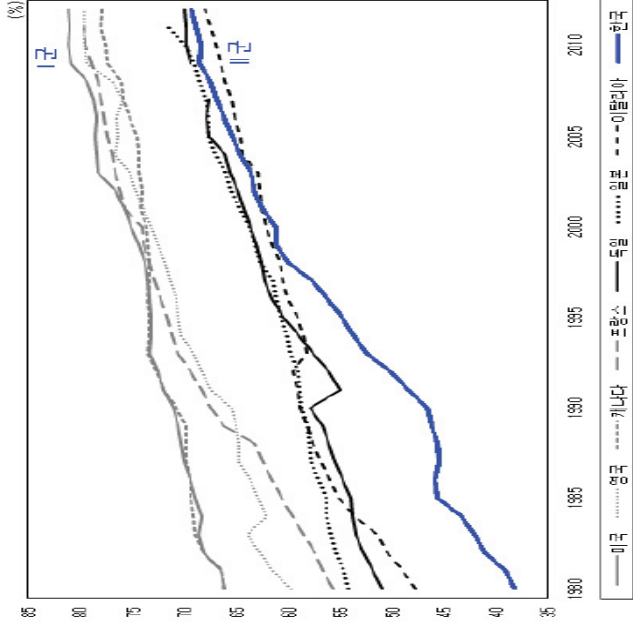
(参考) 国家公務員の内定者が内定を得た民間企業の規模



주요국 서비스업 비중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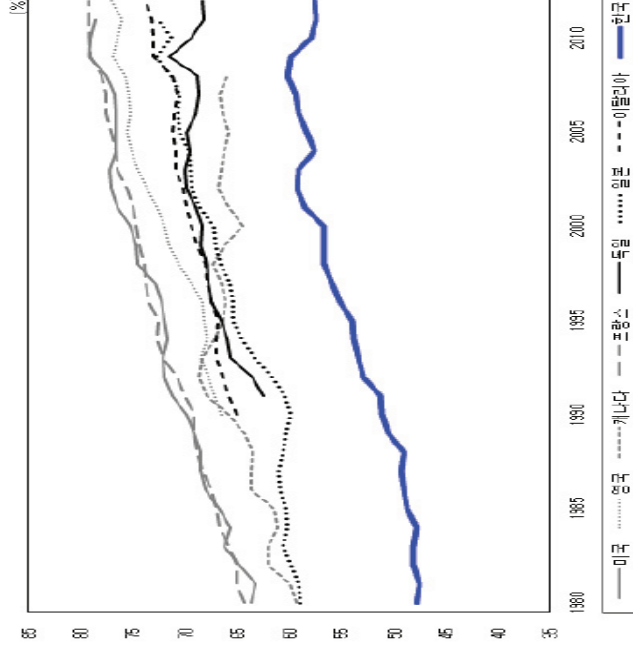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순으로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선두그룹
 • 반면, 일본, 독일, 한국, 이탈리아 등은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함 → 제조업 중심 국가라는 공통점

[그림 2] 주요국의 서비스업 고용비중 변화 추이



자료: OECD, Annual Labor Forc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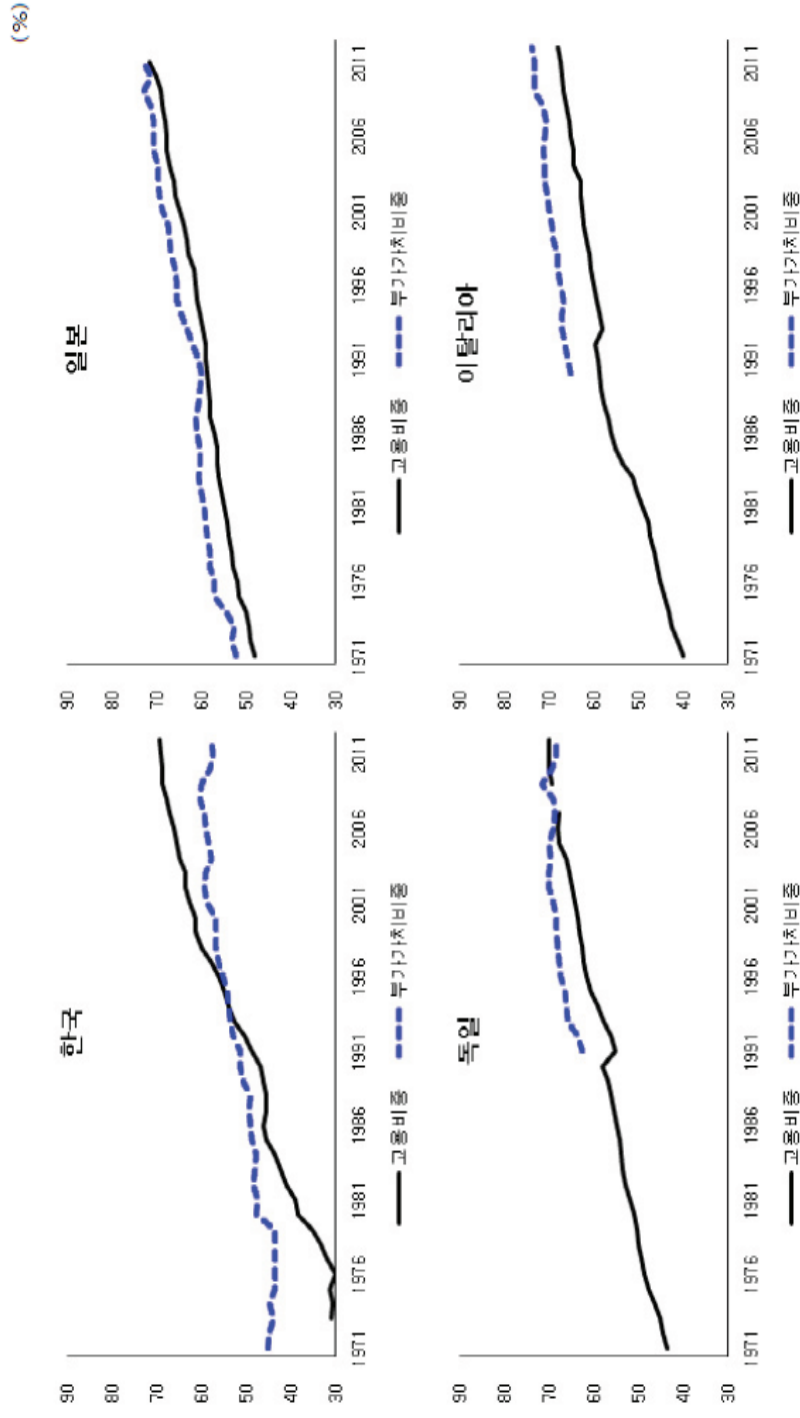
[그림 3] 주요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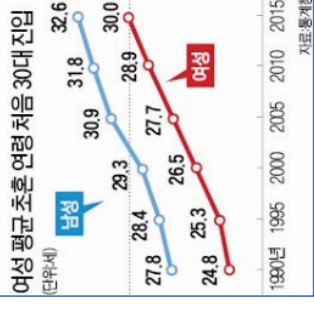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제조업 중심 국가들 간 비교

[그림 5] 서비스업 비중 변화 추이 (11군 국가들과 한국)



-KDI논법: 독일, 일본 등 제조업 중심 국가들과 비교해도 부가가치생산성이 크게 떨어짐. 따라서 한국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제고가 핵심과제



JTBC 탐사 플러스 취재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 대상 조사 결과 (2016.2.29)
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 공무원(22.6%), 2위 '건물주와 임대업자'(16.1%)

결혼정보회사 듀오후먼라이프연구소 '대한민국 미혼남녀 결혼인식'에 대한 연구결과(2018) **남편 직업으로는 15번째, 아내 직업으로는 5번째 1위가 공무원, 공사**

통계청의 '2016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2016.7.21) 청년 취업준비생은 65만 2,000명, 이 중 '공시생(사범시험 및 5급임용시험포함) 25만6,000명, 일반 기업 취업준생은 약 14만 명

2018 이상적 배우자의 조건 1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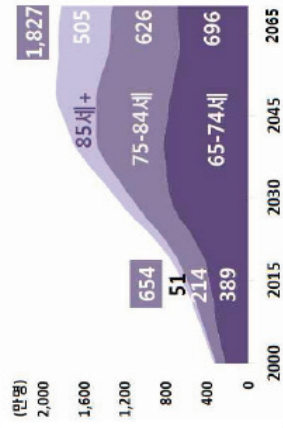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
신장 177.4cm	신장 164cm
연소득 5,319만원	연소득 4,194만원
자산 2억 4,999만원	자산 1억 6,948만원
연령차이 3~4세 연상	연령차이 3~4세 연하
4년 대졸	4년 대졸
공무원·공사	공무원·공사
성격 > 경제력 > 가정환경	성격 > 외모 > 가치관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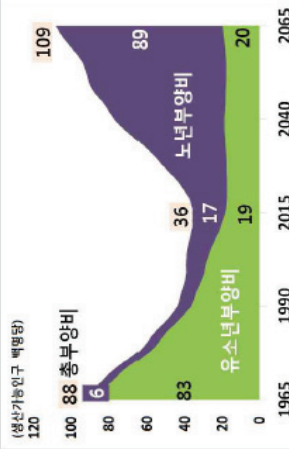
2018년 이상적 배우자상. [듀오 제공]

- 결혼정보업체 가연, 미혼남녀 500명 대상 '결혼에 대한 인식' 정기 설문 조사 결과
- 현재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한 이유, 경제적 상황(54%), '사회적 제도(12.2%)', '가족(5.8%)', '불안정한 고용(4.4%)'
- 결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소득 **전체 응답자의 39.4%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 *공공양반, 직장신분, 스펙계급 사회에서 무리수-->대출, 정규직, 최저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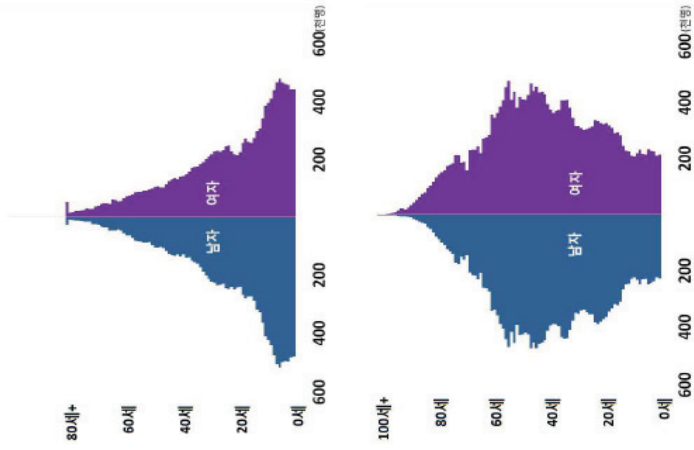
고령인구, 2000~20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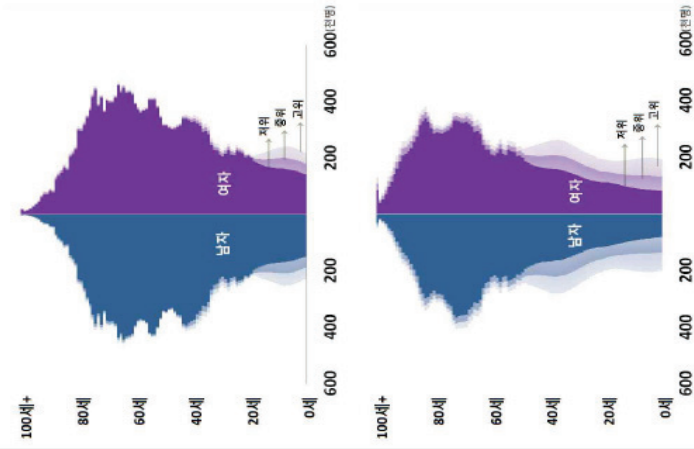
부양비, 1965~2065년



인구피라미드, 1965, 2015년



인구피라미드, 2035, 20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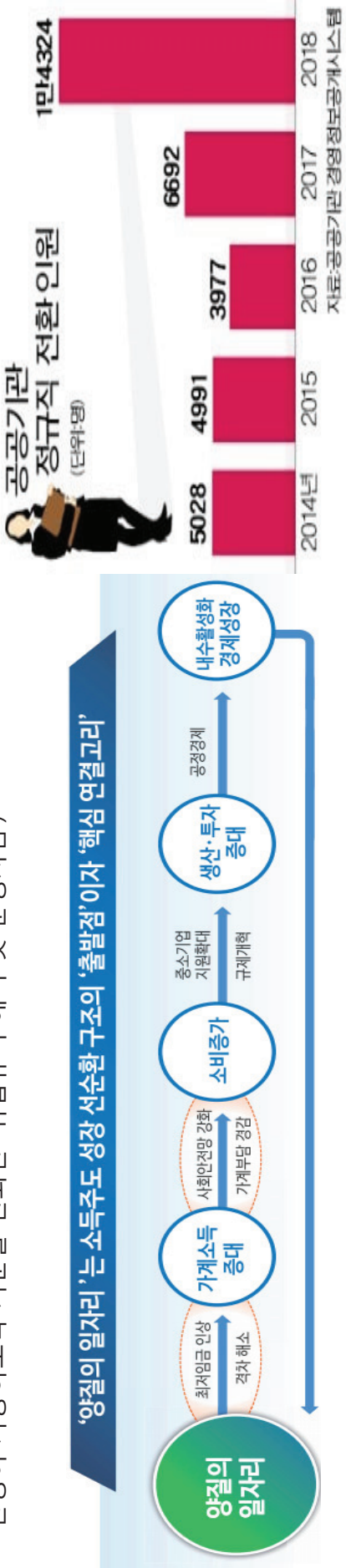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 노조에 대한 인식(2017.1.15 조선일보 인터뷰)
 기자 질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족 노조,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문재인: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사내 유보금은 어디다 쓰나?"

기자 질문: 대기업 노조 등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맞는 말이지만 한데 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이 10%다.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대기업 노조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일자리 대물림 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나.....아직은 노동자들의 권익이 열악하다. 전체를 균형있게 봐야한다. 아직도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정년이 60세로 돼있지만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다. 법적 정년도 제대로 못채우고 직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인데 말하자면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노조가 문제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16년 1월에 도입된 2대 지침은 2017년 9월 폐기(2대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정한 교육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해고 기준을 규정한 '공정인사지침'과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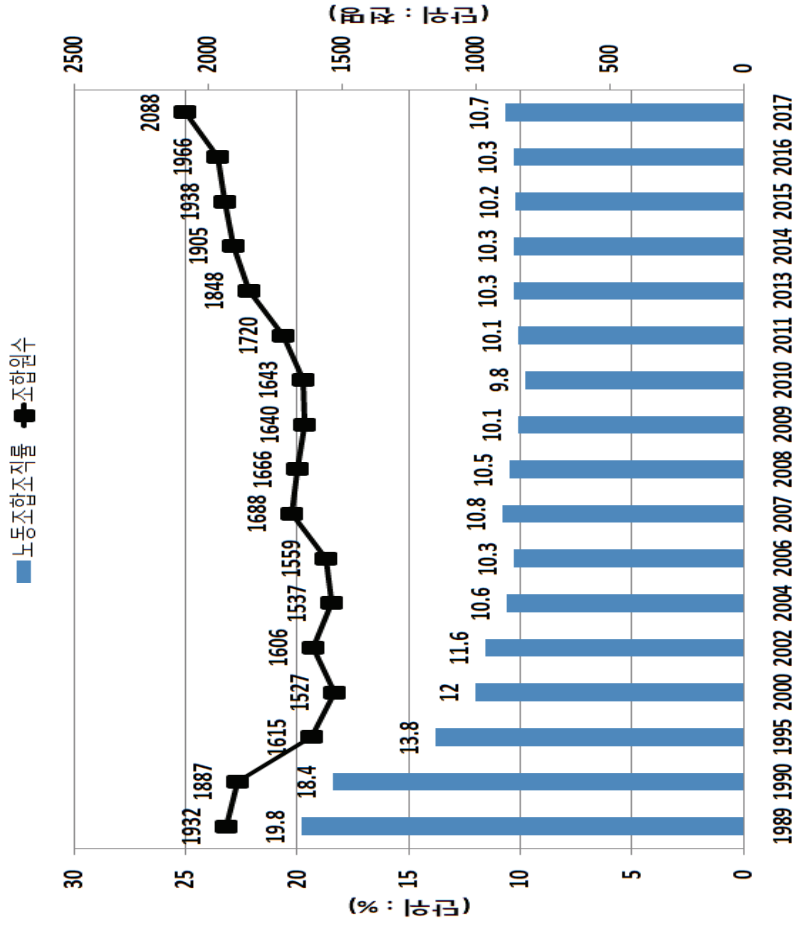
-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2017.9.27)에서 만성적 하위 분야
1. 여성경제활동(90→90), 고용·해고관행(113→88), 노사협력(135→130) 등
 2. 은행건전성(102→91), 대출용이성(92→90), 벤처자본이용가능성(76→64) 등
 3. 정부규제부담(105→95), 정책결정투명성(115→98), 기업경영윤리(98→90) 등

⑦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 77 → 73위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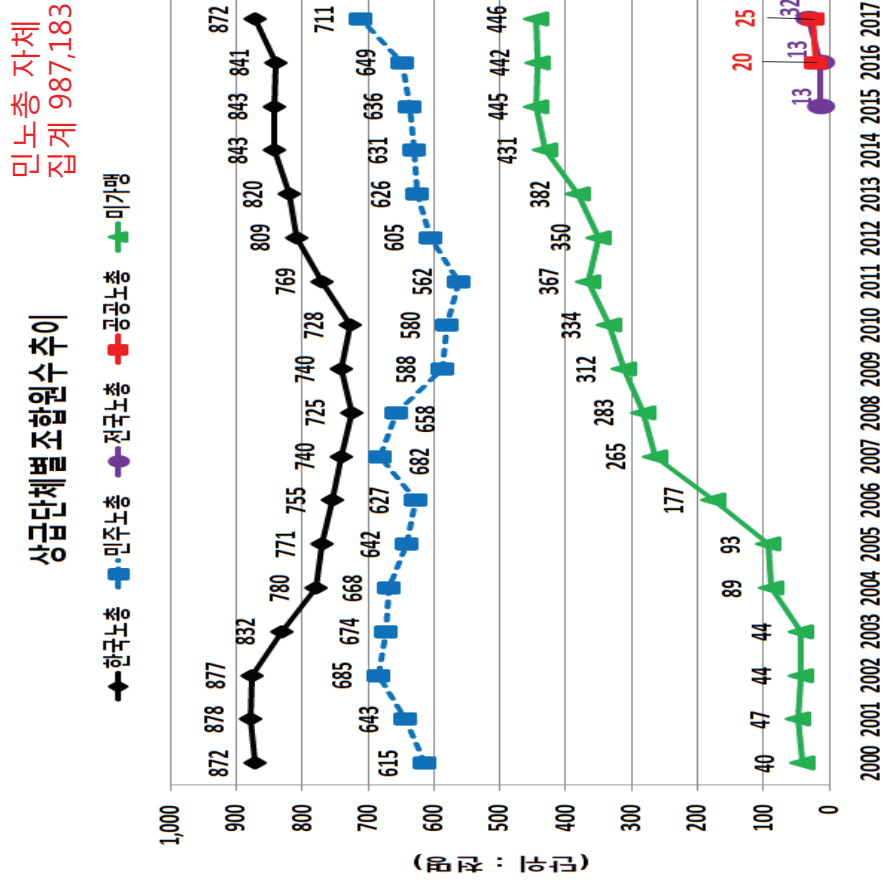
항목	순위		항목	순위	
	'17	'16		'17	'16
노사간 협력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130	135	보수 및 생산성 (Pay and productivity)	15	16
임금결정의 유연성 (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62	73	전문경영인에 대한 신뢰 (Reliance on professional management)	39	30
고용 및 해고관행 (Hiring and Firing practices)	88	113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 (Country capacity to retain talent)	29	29
정리해고 비용* (Redundancy cost)	112	112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 (Country capacity to attract talent)	42	49
근로유인에 대한 과세의 효과 (Effect of taxation on incentives to work)	60	64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force)	90	90

고용노동부,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2018.12.21)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수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추이



민노총 자체 집계 987,183

2017년, 전년 대비 12만여 명 조합원 증가(민노총 6만6천, 한노총 3만1천명)

노조원 규모별 조직현황

구분	노조원 규모별 조직현황					총계
	50명 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노조수* (비율)	3,363 (54.4)	973 (15.8)	1,093 (17.7)	269 (4.4)	233 (3.8)	6,177 (100)
조합원수 (비율)	56,294 (2.7)	68,588 (3.3)	182,248 (8.7)	103,666 (5.0)	164,752 (7.9)	2,088,540 (100)

사업장 규모별 조직현황

구분	사업장 규모별 조직현황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 근로자 수	11,568,000	3,927,000	2,057,000	2,466,000
조합원 수	26,909	136,537	307,146	1,413,654
조직률	0.2	3.5	14.9	57.3

구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노총		공공노총		미가맹	
	조합원수	비율	조합원수	비율	조합원수	비율	조합원수	비율	조합원수	비율
전체 조합원 수	2,088,540	100	711,143	100	32,771	100	25,091	100	446,612	100
기업별노조 조합원수	907,007	54.2	120,083	16.9	759	2.3	6,617	26.4	306,033	68.5
초기업노조 조합원수	1,181,533	45.8	591,060	83.1	32,012	97.7	18,474	73.6	140,579	31.5

민주노총 조직현황(2018.12 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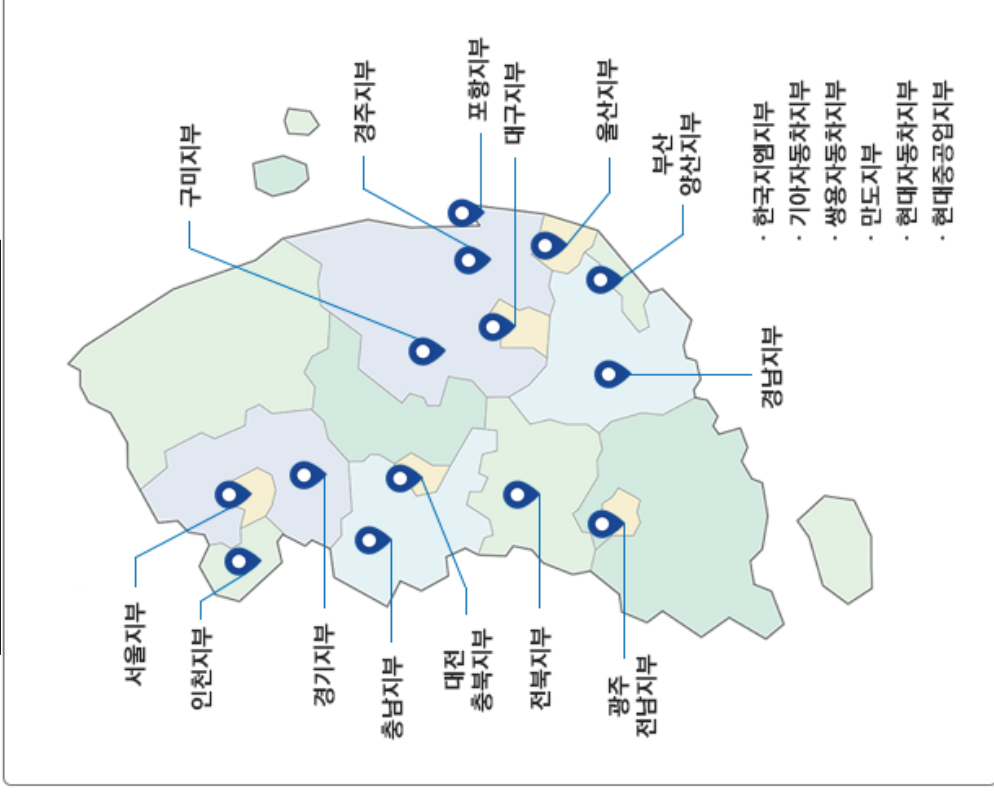
가맹조직	노조수 (지부/지회)	조합원 현황(2018년 12월 말 현재)			평균연령	전임(상근) 간부 수	확대간부 (단위대의 원포함)수	성격
		전체	여성	비정규직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조 4 (지부 91)	142,283	531	135,743	44.5	257	512	주요 건설사, 플랜트, 타 워크레인 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지부 225	208,910	63,172	84,384	-	-	-	공공(철도, 지하철, 건물 공단, 가스공사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 19 (지부 219)	95,948	39,000	0	42.4	227	2,353	공공(학교)
전국교수노동조합	지부 13	401	-	0	-	-	-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20 (지회 333)	176,343	10,094	13,857	44.4	249	5,732	글로벌과점&국내독과점 (완성차/부품사,조선 등)
전국대학노동조합	본부 16 (지부 135)	8,024	-	-	-	45	186	공공(학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노조 17	34,797	8,373	24,357	48	119	1,75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 11 (지부 174) (지회 5)	66,288	51,359	3,877	-	300	2,500	규제산업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회 10	1,846	-	1,846	-	3	116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68,921	-	-	-	-	-	규제산업(농협, 축협, 증 권사, 보험사, krx 등)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노조 84	81,947	66,165	56,323	41.5	285	2,228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 147	14,460	4,537	625	-	-	-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2,953	2,230	2,527	-	6	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 17 (지회 252) (분회 9,964)	50,010	34,649	30	46.1	76	1,871	공공(학교)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노조 22	5,438	2,188	0	42	30.5	342	
전국민주화학생유노동조합연맹		28,614	3,864	918	40.1	172	3,143	
총계		987,183	286,162	324,487	43.6	1,770	20,769	

2017년 말 786,563명 --> 2018년 말 987,183명으로 209,298명 증가(25.5%)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208,910)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발전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유신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지부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전국 금속노동조합(176,343)



현대자동차 조합원
 총원(19년 3월기준) : 49,202명
 울산 본조 : 26,211명
 전주위원회 : 4,191명
 아산위원회 : 2,725명
 남양연구소위원회 : 5,647명
 판매위원회 : 6,655명
 정비위원회 : 2,455명
 모비스위원회 : 1,313

현대자동차 46,977
 49,665명(2016년)
 기아자동차 31,432
 한국 지엠 14,016
 만도 2,376

'취업난' 청년 우는데...1억 연봉에 파업하는 노조

입력2019.05.17 17:41 수정2019.05.18 06:58 지면A1(한국경제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성노조(화학섬유노조)** 소속 **한화토탈 노조**는 지난 3월 1차 파업에 이어 지난달 25일 다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 8월 시작한 2018년도 임협 교섭을 아직 타결하지 못했다. 노조는 당초 기본급 10.3% 인상을 요구했다. 복지 항목까지 포함하면 실질 인상률이 28.9%에 이른다. 회사 측은 2.4% 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란 비판이 제기되자 노조는 기본급 인상 요구안을 4.3%로 낮췄다. 그래도 석유화학업계의 지난해 평균 임금 인상률(2.2%)의 두 배 수준이다. 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못 받은 임금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한화토탈 영업이익과 생산직 평균연봉



*2018년 연봉은 임금협약 미타결로 2017년 기준으로 지급한예수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이 넘는 해고자를 낚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해고자를 낚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초하여 산업별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 11일

강 령



전국금속노동조합

선 언

【조직】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일자리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국제연대】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측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에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측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기꺼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서비스연맹 강령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주노동 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노동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고용안정 확보,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인권과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서비스산업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서비스노동자 전체의 단결과 연대와 평등을 지향한다.
- 우리는 서비스산업 전체 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서 산업별 단일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 우리는 총자본에 맞서 민중연대를 강화하며 사회보장, 인권, 주거, 교육, 의료, 세제, 소비,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문화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개혁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통하여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며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민영화, 개방화를 통한 노동착취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의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선언

역사 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 중심 세력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 평등, 복지, 평화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에 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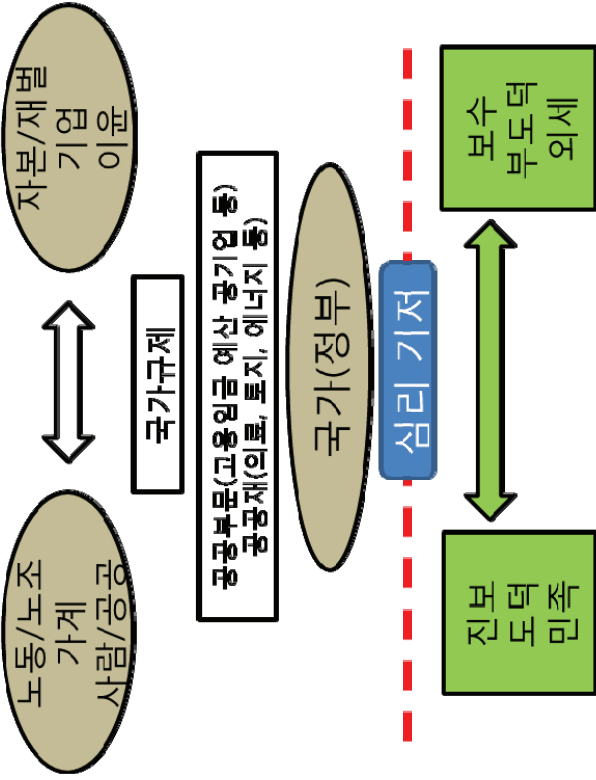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맘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4. 우리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모성보호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남녀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신별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 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6.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 아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횡포와 경쟁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우리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
우리는 공무원의 노동조건개선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3권을 쟁취한다.
우리는 민주사회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한다.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우리는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지향한다.

신자유주의=자본/보수 편향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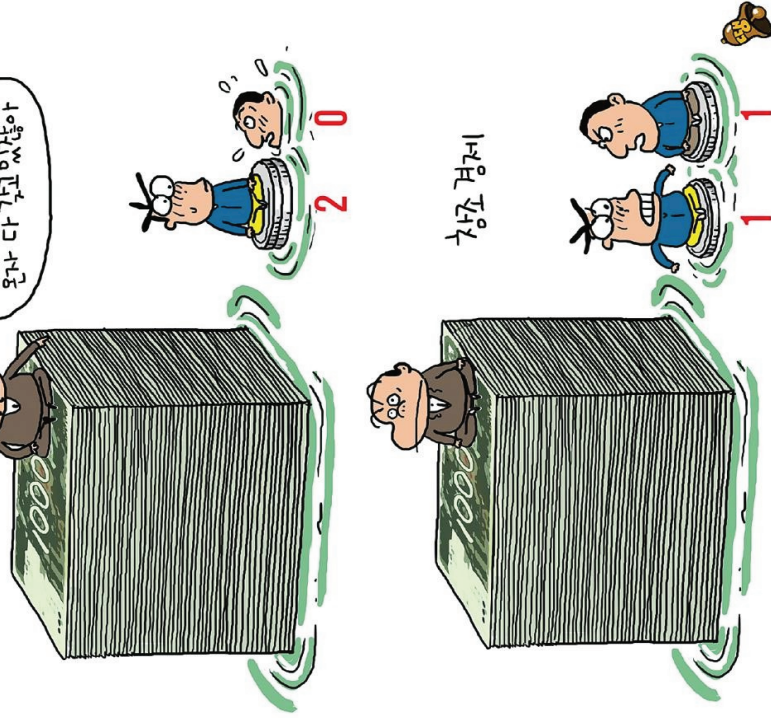
친일매국/냉전/반통일/수구/부패/
기득권/세월호 은폐조작.....절대와

선/정(항일, 민주)vs악/사(친일,독재) 대결

자본 vs 노동의 대결

미일외세 vs 우리민족의 대결

저런 귀족 노동자가
흔하 다 기쁘고 있잖아



2018.7.23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제인 발언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면서 그 원인을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

"우리의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3/2018072302065.html

2018.9.1 청와대 당·정·청 전원회의 문제인 발언

"경제발전의 놀라운 성취 뒤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됐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뤄야 한다"

2014. 5. 20 문제인 특별성명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완화 정책 하에서는 철도와 항공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닙니다.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입니다.

스위스 헌법

제26조 (재산권의 보장)

- ① 재산권은 보장된다.
- ② 공용수용 또는 이에 상응한 재산권 제한의 경우에는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경제적 자유)

- ①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
- ② 경제적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사적 영리활동의 추구 및 영위를 포함한다.

제28조 (조합결성의 자유)

- ① 근로자,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할 수 있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쟁의는 가능한 한 교섭 또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③ 파업 및 직장폐쇄는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고, 평화로운 근로관계의 유지 및 중재 절차의 이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 ④ 특정 범주에 속하는 자들의 파업금지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 헌법은 계약 개념과 보충성 원칙은 흐릿, 반면에 국가의 보호, 육성자 역할 강조. 한국 헌법에는 국가의 보장 (총24번), 보호(15번, 정당, 모성, 여자및 연소자 근로 등), 육성(5번), 창달(2번, 민족문화), 진흥(1번. 평생교육), 계도(1번, 건전한 소비행위) 의무를 수두룩 명기(안전보장10번)

보장 대상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제7조) "복수정당제"(제8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제10조) "국민의 재산권"(제23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제31조) "적정임금"(제32조)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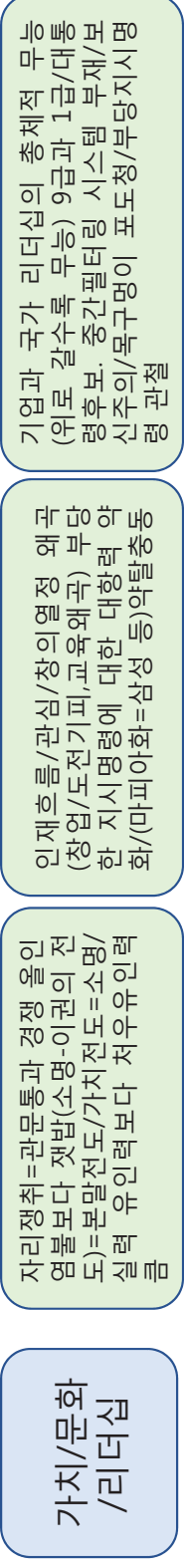
노동조합은 민주진보노동 진영의 (핵)무력. 2013년 SRT문제로 철도노조 파업 당시 위력 입증.
노동조합 과소 평가. 양보와 자제 호소

노동조합 문제의 뿌리는 갈라파고스적인 토양. 3면이 바다-도피& 저항 근란. 권력을 통한 해결(생존, 보호, 실현) 힘의 불균형, 이념, 국가권력, 갑질, 지대, 약탈과 억압, 이념 등. 복한의 현재 모습도 동일한 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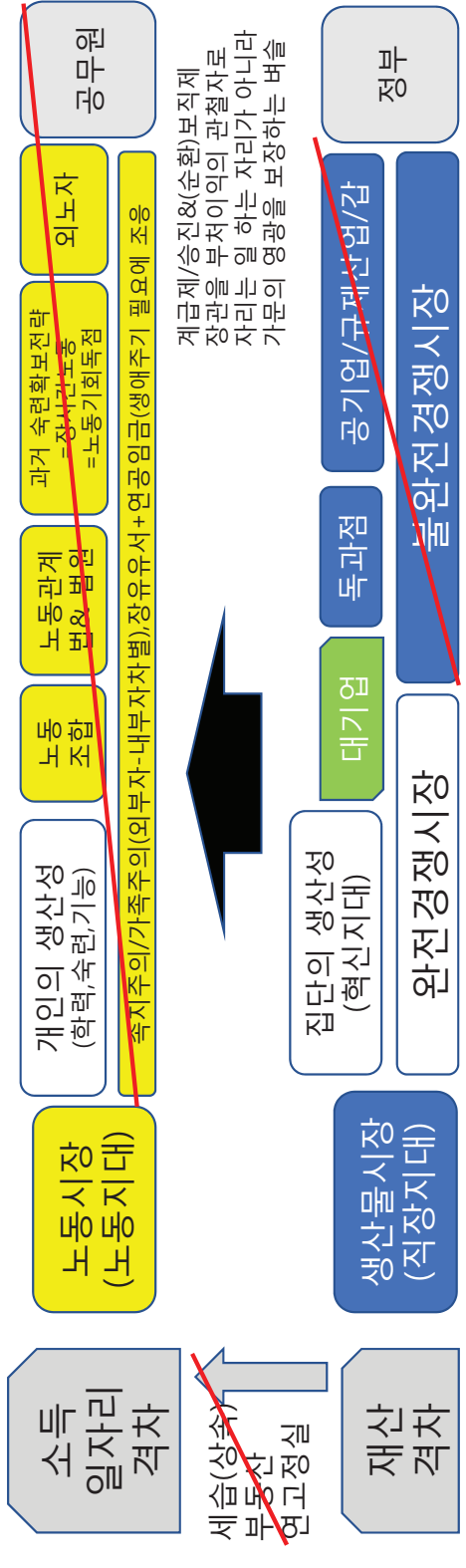
본질적, 일면적 사고 난무. 통합적 사고 안됨 → 임금과 R&D투자,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노동 중심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담론 >> 고용노동통계만 가지고 씨름.
경제 중심 담론 >> 자유-규제완화 중시. 국가전략 중심 담론은 전체를 조망.
지정학적 조건,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 균형적 조명 함.

한국의 약탈 메커니즘(철학, 가치, 문화/사상, 제도) 효과



불평등, 양극화(이종구조, 500만명이 1천만명 류), (청년)일자리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든보잡 귀족노조를 고발한다”

조 형 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前 EBS 이사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아닌 귀족 공무원의 집합체이고 대변인이다.

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조의 조직률은 10.3%이다. 그 중에서 민간분야만의 노조 조직률은 9.1%이고 그에 비해 공무원 분야는 67.6%로 민간 부문보다 7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상 최신 통계는 2017년 자료이며 10.7%이며 이 정부 들어 민노총의 조합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 결과로 보면 노조는 민간노동자들의 대표성이 전혀 없다고 하겠다. 민간 노동자들의 91%는 노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고 교원들은 17.3%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지만 노조와 비슷한 성격의 교총에 가입한 숫자까지 합하면 이 또한 거의 절반에 이른다. 교총이 노조는 아니지만 하는 일은 노조와 거의 비슷하다.

한편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69만 명의 2012년도 민주노총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1.2) 공무원, 공공기관, 전교조, 대학병원, 은행 등 공공기관 혹은 공공분야 성격의 노조원들이 31만 6천명에 이른다. 공공운수연맹의 7만여 노조원들도 공영제의 성격을 감안하면 공공분야로 분류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노총의 절반은 공공의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무원 및 공사 직원 그리고 교원들과 공공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는 바, 한마디로 귀족 공무원들의 집합체라고 불러야 맞다.

한편 귀족 금속노조는 귀족 공무원들의 돌격대이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귀족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집회시위 현장에 뒷짐 지고 나타나면 돌격대들은 자신들의 불법 폭력을 숨기려고 또 다시 마스크를 쓰고 몽둥이를 든다. 이것이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의 진짜 모습이다.

국민은 도대체 언제까지 귀족공무원과 귀족노조를 위해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답답하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든보잡의 출현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드리워진 암울한 그림자이다. 6년전 광주형 일자리를 들고 나왔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가장 큰 반대는 귀족노조

인 기아자동차 노조이다. 연봉 1억에 가까운 귀족 노동자들이 연봉 4천만 원만 받아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뿐 아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도입률이 전세계 평균의 7배가 넘고 있다. 로봇이 도입된다면 대기업 자동차 공장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앞다투어 로봇을 도입한다. 이는 대기업 귀족노조들이 자신들의 인건비는 손대지 말고 자신들의 해고도 거론하지 말고 오직 하청업체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로봇을 도입해도 좋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노동의 양극화와 이중성이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제 대안을 생각해보자.

귀족공무원들이 돌격대인 귀족금속노조를 앞세워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요새는 동네 주폭들도 바로 잡아 넣는 세상이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이 아닌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030년에는 현재의 좋은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세상이 곧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사고에 젖어들어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국민들은 귀족 공무원들이 속한 기관을 가장 우선적으로 민영화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상당히 늘어난다. 청년 일자리도 동시에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의 민영화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강원도 강릉에 사는 강릉중학교 교사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48만 교육공무원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해당 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면 교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교원의 민영화이고 수요자 중심 교육의 근본적 해법이다. 학생이 사라지고 있고 그나마 적은 학생들이 배우기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시험보고 줄 세우는 일만 하는데 그 학교 교사들을 위해 연간 35조원의 인건비를 쓰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일이다.

귀족 금속노조를 앞세워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귀족 공무원들을 위해 별도의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을 돌리면서 막대한 혈세를 쓴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4대 연금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고용을 보장하고 권위와 존경을 실어준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이 표면화 되어 있는바 지금처럼 귀족 금속노조를 돌격대 삼아 다시 국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민간 노조와 함께 할 때는 언젠고,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처럼 별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역겨워서 못 들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해왔는데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성장신화가 올해부터 깨지고 있다. 제조업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무역 1조 달러 트로피마져 반납해야 할 때가 돌아오고 있다. 중국은 물론 인도에도 못 미치는 제조업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귀족 공무원들과 귀족노조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2030년, 당신들의 자식들 또는 옆집 손자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관광객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을 때, 연금 받아서 해외여행 다녀오는 당신들의 노후가 참으로 행복할까?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표 1. 민주노총 조합원 현황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료에 공공·민간 구분란 추가, 2012년)

구분	가맹조직	노조명칭	노조수	여성조합원 수	전체조합원수
민간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35	340	7,000
민간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36	100	20,000
민간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6	700	57,258
공공	공공기관	공공운수노조	87	25,000	65,585
민간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23	2,200	28,094
민간	공공운수연맹	미전환 노조	72	3,600	40,716
공공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10	22,700	75,700
공공	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7	70	800
민간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228	6,804	141,995
민간	금속노조	미전환노조	5	-	7,393
공공	대학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124	2,983	7,021
민간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연맹	59	1,284	4,144
공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51	25,000	37,848
공공	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8	800	1,600
민간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3	128	150
민간	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동조합	1	14	16
민간	서비스연맹	미전환노조	63	8,184	9,550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농협노동조합	61	3,044	8,051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16	1,813	4,316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39	8,577	18,044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수협노동조합	16	200	600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축협노동조합	50	836	1,800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40	199	240
민간	사무금융연맹	미전환 노조	69	11,750	26,882
공공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135	1,981	12,385
민간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동조합	20	3,171	3,700
민간	여성연맹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2	25	25
민간	여성연맹	미전환 노조	1	30	30
공공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57	38,832	60,249
민간	화학섬유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71	786	6,890
민간	화학섬유연맹	산별미전환노조	17	287	8,062
민간	정보경제연맹	기업별노조	11	179	1,185
공공	학교비정규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112	21,023	21,899
민간	지역본부	직가입노조	107	6,662	14,434

표 2. 민주노총의 조합원 구성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2012년)

구분	분야	조합원수	구분	분야	조합원수	
공공	공공 분야 합계	316,138	민간	민간 분야 합계	377,524	
	공무원노조	75,700		금속노조	149,388	
	공공기관	65,585		건설산업연맹	84,258	
	전교조	60,249		공공운수연맹	68,810	
	보건의료노조	37,848		사무금융연맹	26,882	
	사무금융연맹	33,051		화학섬유연맹	14,952	
	학교비정규직	21,899		지역본부	14,434	
	언론노조	12,385		서비스연맹	9,716	
	대학노조	7,021		민주일반연맹	4,144	
	비정규교수노조	1,600		여성연맹	3,755	
	교수노조	800		정보경제연맹	1,185	
	합계	총합계 693,362				

표 3. 임직원수가 많은 주요 공공기관의 노조가입현황 (2015/10 현재, 공공기관 알리오)

공공기관명	복수	임직원총수	가입대상수	가입인원	총연합	연합
한국철도공사	1	26,946	21,631	18,397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철도공사	2			957	한국노총	직가입
한국철도공사	3			10	미가입	미가입
한국전력공사	단일	19,790	14,756	14,756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일	12,634	12,193	10,724	미가입	미가입
한국수력원자력	단일	10,277	6,484	6,484	미가입	미가입
중소기업은행	단일	8,009	9,767	9,668	한국노총	직가입
한국토지주택공사	1	6,031	5,736	3,160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2			1,945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3			243	미가입	미가입
한국농어촌공사	단일	4,981	5,242	5,133	한국노총	공공노조
근로복지공단	1	5,178	3,172	3,129	한국노총	공공노조
근로복지공단	2			1,890	민주노총	기타
국민연금공단	단일	5,034	5,287	3,914	민주노총	공공운수
서울대학교병원	단일	5,248	5,399	1,685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전KPS(주)	단일	4,992	3,944	3,944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도로공사	1	4,353	4,510	4,048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도로공사	2			473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도로공사	3			208	미가입	미가입
한국수자원공사	1	4,212	3,906	3,906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수자원공사	2			11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	1	3,547	3,785	3,130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국토정보공사	2			175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부산대학교병원	단일	3,713	4,259	2,148	민주노총	직가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774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3,816	3,346	2,509	민주노총	직가입
전남대학교병원	단일	2,988	2,503	1,474	민주노총	직가입
한국가스공사	단일	3,443	3,029	3,027	민주노총	공공운수
대한적십자사	1	3,403	2,414	1,920	민주노총	기타
대한적십자사	2			85	한국노총	직가입
(주)강원랜드	단일	3,305	2,823	2,809	민주노총	공공운수
경북대학교병원	단일	2,921	2,723	1,037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단일	2,602	2,239	2,226	미가입	미가입
한국산업은행	단일	2,959	2,304	2,121	한국노총	직가입
한국남동발전	1	2,111	1,621	1,400	미가입	미가입
한국남동발전	2			214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일	1,981	1,700	843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전력기술	단일	2,137	1,471	1,471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동서발전	1	2,225	1,602	1,251	미가입	미가입
한국동서발전	2			327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중부발전	1	2,326	1,565	746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중부발전	2			683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중부발전	3			7	미가입	미가입
한국서부발전	1	2,067	1,437	1,187	미가입	미가입
한국서부발전	2			231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남부발전	1	2,092	1,370	993	미가입	미가입
한국남부발전	2			366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산업은행	단일		2,304	2,161	한국노총	직가입
신용보증기금	1		1,339	1,339	한국노총	직가입
신용보증기금	2			87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주택관리공단	1		2,023	1,860	한국노총	공공노조
주택관리공단	2			2	미가입	미가입
대한석탄공사	1		1,282	1,254	한국노총	광산노조
대한석탄공사	2			9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환경공단	1		1,971	1,225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환경공단	2			518	민주노총	공공운수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		433	326	한국노총	공공노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			105	한국노총	공공노조
전북대학교병원	단일		1,903	1,213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공항공사	단일		1,253	1,242	민주노총	공공운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일		2,267	1,699	민주노총	정보경제노조
충남대학교병원	단일		2,061	1,052	민주노총	직가입
한국조폐공사	단일		1,120	1,100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철도시설공단	단일		1,349	1,036	민주노총	공공운수
그랜드코리아레저	1		1,321	1,320	미가입	미가입
그랜드코리아레저	2			7	민주노총	민간서비스노조
경상대학교병원	단일		1,488	815	민주노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일		1,186	1,184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전KDN	단일		1,679	1,679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노조
한국석유공사	단일		1,138	1,138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1		1,277	947	미가입	미가입
한국원자력연구원	2			27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일		416	368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지역난방공사	단일		1,274	1,274	민주노총	공공운수
교통안전공단	단일		1,136	1,073	한국노총	자동차노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단일		604	491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	단일		951	923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가스안전공사	단일		1,060	1,060	민주노총	공공운수
기술신용보증기금	1		726	698	한국노총	직가입
기술신용보증기금	2			28	미가입	미가입
한국원자력의학원	단일		955	621	민주노총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	단일		1,137	1,105	한국노총	직가입
충북대학교병원	단일		1,045	652	민주노총	공공운수
도로교통공단	단일		2,061	2,061	한국노총	공공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일		1,036	970	한국노총	공공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	단일		917	914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마사회	1		7,149	616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마사회	2			159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마사회	3			1,953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감정원	단일		615	615	한국노총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단일		659	657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가스기술공사	단일		1,173	1,173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수출입은행	단일		706	703	한국노총	직가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일		932	156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일		907	519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관광공사	단일		425	425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단일		526	503	한국노총	공공노조
제주대학교병원	단일		875	297	민주노총	공공운수
예금보험공사	단일		523	502	미가입	미가입
강원대학교병원	단일		820	666	민주노총	공공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일		539	521	한국노총	공공노조
공무원연금공단	단일		429	429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단일		550	497	미가입	미가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일		499	402	미가입	미가입
코레일유통(※)	단일		266	266	한국노총	기타
국립중앙의료원	1		800	308	민주노총	기타
국립중앙의료원	2			82	한국노총	기타
한국예탁결제원	1		419	406	민주노총	기타
한국예탁결제원	2			13	미가입	미가입
한국무역보험공사	단일		403	403	미가입	미가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일		391	129	미가입	미가입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일		386	384	미가입	미가입
에너지관리공단	단일		422	422	미가입	미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일		513	392	한국노총	기타
한국광물자원공사	단일		447	436	미가입	미가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일		365	115	미가입	미가입
한국전기연구원	단일		397	248	민주노총	공공운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단일		233	124	민주노총	직가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단일		691	161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단일		505	500	미가입	미가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일		309	160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화학연구원	단일		332	105	민주노총	공공운수
대한주택보증(※)	단일		281	275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기계연구원	단일		319	90	미가입	미가입
한국전력거래소	1		270	108	미가입	미가입

한국전력거래소	2			175	미가입	미가입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일		403	323	미가입	미가입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단일		357	320	한국노총	공공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496	185	민주노총	정보경제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120	미가입	미가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21	미가입	미가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10	미가입	미가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7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연구재단	단일		307	206	미가입	미가입
축산물품질평가원	단일		241	234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일		497	430	민주노총	정보경제노조
한국소비자원	단일		332	293	민주노총	직가입
광주과학기술원	단일		114	46	민주노총	공공운수
선박안전기술공단	단일		283	283	한국노총	공공노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일		220	210	미가입	미가입
한국국제협력단	단일		310	310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단일		226	78	민주노총	공공운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일		205	205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일		228	154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고용정보원	단일		200	152	한국노총	공공노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일		379	1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237	192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8	민주노총	기타
한국시설안전공단	단일		493	295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항공중앙연구원	단일		141	56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콘텐츠진흥원	단일		235	160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단일		136	136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단일		304	186	민주노총	공공연구
한국장학재단	단일		240	133	미가입	미가입
국토연구원	1		311	8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토연구원	2			10	미가입	미가입
대한체육회	단일		140	130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단일		195	100	민주노총	공공운수
부산항만공사	단일		157	152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표 4. 공공기관 122개 노조의 상급단체 현황 (2015년 10월 현재, <http://www.alio.go.kr>)

민노총 합계	69,196	미가입 합계	32,239	한국노총 합계	83,315
한국철도공사	18,397	국민건강보험공단	10,724	한국전력공사	14,756
국민연금공단	3,914	한국수력원자력	6,484	중소기업은행	9,668
한국국토정보공사	3,130	한국전기안전공사	2,226	한국농어촌공사	5,133
한국가스공사	3,027	한국남동발전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5,105
(※)강원랜드	2,809	그랜드코리아레저	1,320	한국도로공사	4,52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509	한국동서발전	1,251	한국산업은행	4,282
부산대학교병원	2,148	한국서부발전	1,187	한전KPS(※)	3,944
대한적십자사	1,920	한국남부발전	993	한국수자원공사	3,917
근로복지공단	1,890	한국원자력연구원	947	근로복지공단	3,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99	예금보험공사	502	한국마사회	2,728
서울대학교병원	1,68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00	도로교통공단	2,061
전남대학교병원	1,47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497	주택관리공단	1,860
한국전력기술	1,471	한국광물자원공사	436	한전KDN	1,679
한국지역난방공사	1,274	에너지관리공단	422	신용보증기금	1,339
한국항공공사	1,242	한국무역보험공사	403	대한석탄공사	1,254
전북대학교병원	1,2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02	한국환경공단	1,225
(※)한국가스기술공사	1,173	한국산업단지공단	38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84
한국조폐공사	1,100	한국정보화진흥원	323	한국석유공사	1,138
한국가스안전공사	1,060	한국전력거래소	283	한국자산관리공사	1,105
충남대학교병원	1,052	한국토지주택공사	243	교통안전공단	1,073
경북대학교병원	1,03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10	국립공원관리공단	970
한국철도시설공단	1,036	한국도로공사	208	한국철도공사	95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43	한국연구재단	206	한국산업인력공단	923
경상대학교병원	8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1	인천국제공항공사	914
한국중부발전	683	한국장학재단	13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74
강원대학교병원	66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9	한국중부발전	746
중소기업진흥공단	65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15	한국수출입은행	703
충북대학교병원	652	한국기계연구원	90	기술신용보증기금	698
한국원자력의학원	621	기술신용보증기금	28	한국감정원	6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19	한국예탁결제원	13	대한법률구조공단	521
한국환경공단	518	한국철도공사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03
한국인터넷진흥원	430	국토연구원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1
공무원연금공단	429	한국중부발전	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431
한국관광공사	425	주택관리공단	2	한국주택금융공사	392
한국예탁결제원	406	이상 미가입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2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68			한국국제협력단	310
한국남부발전	366			선박안전기술공단	283

한국동서발전	327			대한주택보증(주)	275
국립중앙의료원	308	이하 민주노총		코레일유통(주)	266
제주대학교병원	29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3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92
한국시설안전공단	29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24	한국국토정보공사	175
한국소비자원	293	한국화학연구원	1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4
한국전기연구원	24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0	한국고용정보원	152
축산물품질평가원	234	국토연구원	87	부산항만공사	152
한국서부발전	231	신용보증기금	87	대한체육회	130
한국남동발전	2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8	대한적십자사	8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5	한국학중앙연구원	56	국립중앙의료원	8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2	광주과학기술원	4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86	한국원자력연구원	2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1	대한석탄공사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		
한국콘텐츠진흥원	160	그랜드코리아레저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표 5.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e-나라지표)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가입대상 공무원
2006년	78	63,275	21.8	290,000
2007년	98	173,125	59.7	290,000
2008년	95	215,537	72.1	299,000
2009년	95	158,910	53.1	299,000
2010년	96	164,147	55.6	295,000
2011년	99	165,566	56.1	295,000
2012년	110	164,683	55.8	295,000
2013년	122	179,615	60.9	295,000
2014년	125	184,260	61.6	299,000

표 6.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e-나라지표)

[단위 : %, 개소, 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동조합 조직률(%)	10.3	10.3	10.8	10.5	10.1	9.8	10.1	10.3	10.3
노동조합수	5,971	5,889	5,099	4,886	4,689	4,420	5,120	5,177	5,305
조합원(천명)	1,506	1,559	1,688	1,666	1,640	1,643	1,720	1,781	1,847
조직대상근로자(천명)	14,692	15,072	15,651	15,847	16,196	16,804	17,090	17,338	17,981

표 7.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비교(%)(e-나라지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10.3	11.3	17.7	17	25.6

표 8. 교원노조 조직현황

연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가입대상 교원
1999년	2	87,668	26.4%	331,000
2000년	2	106,060	31.6%	336,000
2001년	2	113,056	33.1%	342,000
2002년	2	118,435	32.8%	361,000
2003년	2	120,060	32.0%	375,000
2004년	2	105,000	27.3%	384,000
2005년	2	106,209	27.0%	393,000
2006년	9	104,280	25.8%	404,000
2007년	9	98,649	24.0%	411,000
2008년	10	92,877	22.2%	419,000
2009년	11	82,324	20.7%	398,000
2010년	11	75,425	19.0%	396,000
2011년	11	74,465	18.0%	396,000
2012년	11	69,656	17.3%	402,000
2013년	10	68,748	16.8%	410,000
2014년	10	60,120	14.5%	415,000

표 9. 민간/교원 노조 조직률

	민간 노조 조직률	교원노조 조직률
2006년	9.50%	25.90%
2007년	9.20%	24.30%
2008년	8.80%	21.50%
2009년	8.90%	20.60%
2010년	8.60%	18.90%
2011년	8.90%	18.80%
2012년	9.20%	17.30%
2013년	9.10%	16.80%

표 10. 노조 유무에 따른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

노조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 (만)	103	119	123	133	138	152	166	183	189	204	205	215	225	234	228	238
무 (만)	95	112	121	127	133	144	154	165	171	179	192	202	209	215	218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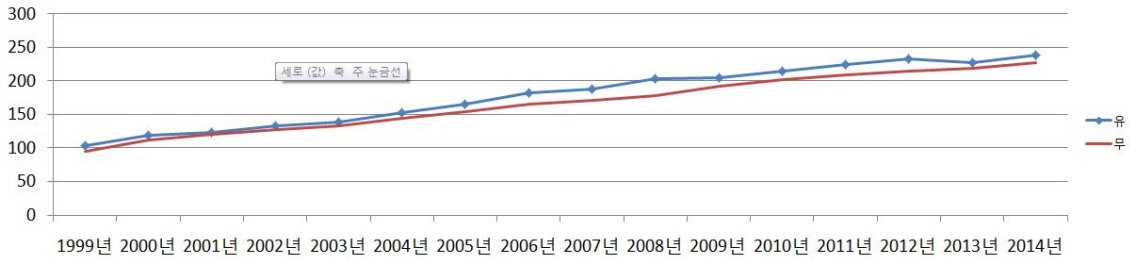


그림 1. 노조 유무에 따른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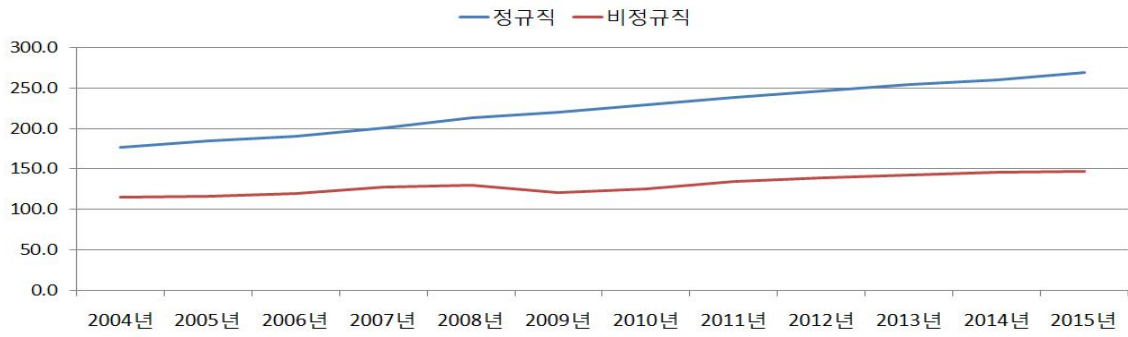
표 11. 금속노조의 대표 현대·기아자동차 직원수 및 직원 연봉 변화 추이
기업정보공시에서 발췌(발췌일 2015.12.14.)

연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직원수	평균급여 (만)	급여총액 (억)	직원수	평균급여 (만)	급여총액 (억)
1998년	37,752	2,625	9,910			
1999년				29,937	2,609	7,810
2000년	49,023	4,371	21,428	29,857	3,368	10,055
2001년	48,831	4,242	20,714	29,377	3,856	11,327
2002년	49,855	4,574	22,804	30,070	4,214	12,672
2003년				31,278	4,500	14,120
2004년	53,218	4,900	26,077	32,252	5,100	16,366
2005년	54,115	5,500	29,763			
2006년	54,711	5,700	31,185	33,005	5,600	18,349
2007년	55,629	6,660	37,049	32,977	5,200	17,009
2008년	56,020	6,800	38,094	32,720	6,400	20,905
2009년	55,984	7,500	41,988			
2010년	56,137	8,000	44,910	32,599	8,200	26,609
2011년	57,105	8,900	50,823	32,411	8,400	27,519
2012년	59,831	9,400	56,241	32,756	9,100	29,739
2013년	63,099	9,400	59,313	33,576	9,400	31,756
2014년	64,956	9,700	63,007	34,112	9,700	33,192
증가율	72.1%	269.5%	535.8%	13.9%	271.8%	325.0%

표 12.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근로형태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규직	177.1	184.6	190.8	200.8	212.7	220.1	229.4	238.8	246.0	254.6	260.4	269.6
비정규직	115.2	115.6	119.8	127.6	129.6	120.2	125.8	134.8	139.3	142.8	145.3	146.7

- 통계표ID : DT_1DE7082
- 통계표명 :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증감
- 수록기간 : 월 2004.08 ~ 2015.08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다운일자 : 2015.12.15 09:23
- 통계표URL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conn_path=I3
: * KOSIS 개편 시 통계표 URL은 달라질 수 있음
- 단위 : 만원,%



〈대한민국진영 시국특별대토론회〉
민노총의 귀족노조, 그 실태와 대안

사례발표

- 도 태 우 (변호사, 법치외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 이 덕 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김 동 근 (청사진 운영위원)

민노총의 법치 파괴 - 문정부 2년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

도태우 변호사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1. 서언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약합니다)의 불법 집회는 총 129회 발생했고 같은 기간 동안에 450여명의 경찰 부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¹⁾.

2015년 11월 14일 민노총이 주도하여 일으킨 1차 민중총궐기에서만 경찰 90여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여 대가 파손되었습니다²⁾.

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³⁾ 2016년 11월의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고, 이어진 선거를 통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글은 문정부 출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민노총에 의한 법치 파괴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민노총의 불법적 행위는 ‘귀족노조의 부당한 횡포’ 차원을 넘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며, 사업체를 지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귀결의 집약적 모습이 유성기업 사태, 현대중공업 사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하에서 각 항목별로 내용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질서 파괴

가. 개요

민노총 산하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임의로 사업장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영역을 배

-
- 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10/25/2017102500086.html> (뉴데일리 2017. 10. 25. 자 보도, 2019. 6. 12. 20:14 방문)
 - 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161703343869> (한국일보 인터넷판, 2018. 10. 17. 자 보도, 2019. 6. 12. 22:59 방문)
 - 3)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48> (뉴스프리존, 2018. 7. 23. 자 보도, 2019. 6. 13. 09:46 방문)

타적으로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국회를 비롯한 제반 공공기관에 대한 무단침입과 불법점거, 폭력 행사, 기물파손, 난동 및 협박과 강요가 일상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런 양상은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 국가와 법치, 문명을 수립해 온 역사의 진전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것으로, 기초적인 사회질서의 붕괴를 불러오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나.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화물연대 사례

(1) 사례 1

지난달(2019년 2월) 18일 오전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민노총 건설노조원 400여 명이 공사장 입구를 막고 민주연합 건설노조원 70여 명의 출근을 막았다. 민노총은 "민주연합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니 이들을 빼고 민노총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옥설을 주고받았다. 일부 노조원은 모래와 자갈을 던졌다. 5일간 계속된 갈등은 건설사가 민노총 노조원을 추가 고용하면서 일단락됐다. 건설사는 예정에 없던 인건비 2억원을 더 쓰게 됐다⁴⁾.

(2) 사례 2

“자기들이 일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란 말입니까.”

지난달(2019년 5월) 1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재건축 현장. 공사장 앞 식당에서 라면을 먹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A 씨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말했다. A 씨와 동료 조합원 3명은 이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우리 조합원만 고용하라”며 출입게이트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끝내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A 씨 일행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민노총의 동향만 살피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국노총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새벽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B 씨는 “우리 조합원도 같이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이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기습 점거했다. 고공농성은 사흘간 이어졌고, 국회의원들까지 중재에 나서 “한국노총 조합원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B 씨는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4월 23일 양대 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집회를 열어 12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9일엔 두 노조가 소화기를 뿌리며 충돌해 13명이 다쳤다.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사 현장 곳곳은 최근 두 노조의 ‘일자리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⁵⁾.

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9/2019030900136.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9. 3. 9.자 보도, 2019. 6. 11. 16:59 방문)

5) <http://news.donga.com/3/all/20190607/95879697/1> (동아일보 인터넷판 2019. 6. 7.자 보도, 2019. 6.

(3) 사례 3

지난(2018년) 6월 경기도의 한 공공청사 신축현장 앞.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각각 현장 출입문을 막고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이 '우리 조합원을 우선 채용해달라'며 집회를 열자, 한노총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공사장이 순식간에 집회장으로 변했다. 민노총은 6~8월까지 수시로 집회를 열었고, 소속 조합원들은 각종 태업, 지시 불응, 현장 무단이탈 등 다양한 수단을 써가며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그 결과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경우 직영팀과 한노총, 민노총 소속 근로자 비율이 지난 5월 1:1:1에서 2개월여 뒤에는 민노총 비율이 60% 수준까지 올라갔다. 형틀목공 공종 역시 민노총 조합원의 비중이 60%대로 높아졌다. 끈질긴 공사 방해와 잇단 집회 후 인력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전국 건설현장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새벽부터 집회를 열어 건설사에 민원이 빗발치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나 안전 규정 등을 문제 삼아 공사를 방해하기 일쑤다. 건설현장 개설과 동시에 민노총 집회가 뒤따르는 것이 전국 주요 건설현장의 공식이 됐을 정도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매출액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76곳 중 71곳이 민노총으로부터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건으로 고발당했다.

더욱 큰 문제는 건설현장의 생산성 저하. 지금까지 민노총 조합원 고용 이후 이들 인력의 숙련도와 그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건설경제>가 지난 7일 입수한 한 공공청사 건축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종에 투입된 노동조합별 근로자 생산성 분석결과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장의 철콘 공종 가운데 형틀목공 근로자의 1인당 1개월 생산량은 △건설사 직접 선발팀(직영팀) 8.9㎡ △한노총팀 7.1㎡ △민노총팀 5.7㎡ 등으로 조사됐다. 직영팀의 생산성을 100으로 보면 한노총팀은 79%, 민노총팀은 64%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나마 현장 초기에는 생산성이 나은 편이다. 민노총 조합원이 모두 세팅된 뒤에는 고의적인 태업 등으로 생산성이 더 나빠진다. 실제 이 현장의 2개월 뒤 민노총팀과 직영팀의 생산성을 비교해보니, 각각 7.3㎡와 3.6㎡로 '더블 스코어'(49%) 수준까지 벌어졌다.

전문건설업체인 A사 임원은 "수년 전부터 건설현장의 권력이 민노총으로 넘어갔다"며 "건설회사들도 민노총에 밀보였지만 공사기간·공사비가 늘어나고 민원관리 부실로 발주처에 찍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토로했다⁶⁾.

(4) 사례 4

(2018년 11월) 26일 오후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2층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 지부에 들어섰다. "건설 일용직인데 노조에 가입하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자, 초록색 노조 조끼를 입은 남자가 구직(求職) 신청서 양식을 내밀었다. "현장이 배정되면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직종란에 '형틀목공'(목수), 경력란에 최소 단위인 '1개월'이라고 적어 냈다. '얼마나 해봤느냐'는 질문에

11. 17:14 방문)

6)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2071453067980651> (건설경제 인터넷판, 2018.

12. 10.자 보도, 2019. 6. 11. 18:07 방문)

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9/2018112900317.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아는 형님 따라 며칠..."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초록 조끼의 한 남자는 "일자리가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받게 될 일당은 15만5000원"이라고 했다. 노조 사무실 여직원이 "조합비는 월 3만원"이라고 했다. 이렇게 아무런 검증 없이 약 10분 만에, 기자는 기능직인 '형틀목수'로 취직할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 들어올 예비 노동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자체 규약을 갖고 있다. 이 규약을 활용, 실업자까지 조합원으로 받아 세(勢)를 불리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작년 초 기준 3만1000명이다. 건설기계 등 4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 '노가다'로 불리는 토목건축 분과 조합원 수가 2012년 26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6년 새 7배로 급증했다.

건설사들은 "건설노조가 이렇게 만든 노조원을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건설사에 고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의 고용 자체를 사실상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제안받은 '일당 15만5000원'은 경력도 기술도 없는 이에게는 상당히 높은 임금이다. 이런 경우 서울시내 직업소개소를 통하면 11만~13만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수수료 10%를 뺀 9만9000~11만7000원을 근로자가 가져간다. M인력사무소 소장은 "15만5000원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경력 1개월 미만 초짜가 절대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민노총 건설노조가 15만5000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시공사인 종합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현장에 들어온 전문건설사를 압박해 노조원을 취직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력 18년차 반장 C씨의 경우 올 초 '인력 전원을 건설노조원으로 고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내가 아는, 검증된 인력만 쓰겠다"며 거절했다. 다음 날 새벽 건설노조원 20여 명이 몰려와 현장 입구에 '외국인 불법고용 반대' 등의 현수막을 펼치고 늘어섰다. 명분은 '외국인 근로자'였지만 실제로는 국적 불문 현장 출입을 막았다. 다시 협상이 시작됐고 결국 10개 팀 중 7개 팀을 노조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이런 일은 이달 평택에서, 10월에는 시흥에서, 5월은 서울 마곡에서도 벌어졌다.

숙련도와 상관없이 둔갑한 민주노총 근로자의 생산성이 좋을 리 없다. 이달 초 수도권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목수들이 콘크리트 틀을 짜고 있었다. 그런데 팀 간 작업 속도가 눈으로 보기에 서로 달랐다. A팀에선 근로자 한 명이 담배를 빼어 물자 다른 팀원 두어 명이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담배가 타는 2분여간 잡담을 주고받다가 터덜터덜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반면 B팀은 취재진이 지켜본 30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이들이 퇴근한 뒤 작업반장과 함께 현장을 돌아본 결과도 그대로였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A팀이 작업한 총면적은 약 160㎡, B팀은 약 250㎡였다. A팀은 민노총 건설노조 인력이고, B팀은 하도급사 반장이 직접 채용했다. 양쪽 모두 '형틀목수' 자격이고, 일당도 21만원씩으로 똑같다. 반장은 "A팀은 목수들이 차는 못주머니만 찻을 뿐, 내가 보기엔 10만원짜리 잡부(보통 인부)"라고 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민노총 인력을 비싸게 쓰면 공사비도 그만큼 오른다"며 "그 돈은 정상적이라면 하도급 건설사가 이익으로 가져가거나, 분양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 통상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정도가 공사비고, 공사비 40%가 인건비다.

이 취재에 응한 회사들은 "절대로 실명이나 현장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중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민노총에 잘못 걸리면 현장이 멈춰서는 게 아니라 회사가 멈춰 서기 때문"이라고 했다.

[알려왔습니다] "민노총, 초보를 숙련공 둔갑시켜 투입... 건설사가 거절 땀 현장 봉쇄"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11. 29일에 "민노총, 초보를 숙련공 둔갑시켜 투입... 건설사가 거절 땀 현장

봉쇄" 라는 제목으로 서울건설산업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하여 비숙련노동자에게 과도한 일당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건설산업노조는 "건설사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고용 중단과 공사 지역 내 국인 우선 고용 등을 요구한 것이며, 비숙련 조합원 일당 15만원은 '뺑튀기'가 아니라 사용자측인 서울·경인지역 철·콘크리트회의와의 임금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5) 사례 5

지난(2018년 11월) 5일 오전 6시쯤 경남 양산의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트럭 수십 대가 막아섰다. 큰 도로로 통하는 길도, 인근 공장으로 이어진 길도 사실상 모두 봉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이 차를 동원해 길을 가로막은 채 집회를 벌였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인 성우하이텍은 물류사 3곳과 계약하고 물건을 운송한다. 이들 물류사와 계약한 화물차주 43명 중 3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화물연대는 성우하이텍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물량 및 차량 배정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공장 주변을 에워쌌다. 집회는 오전 6시부터 17시간 이상 계속됐다. 이날 회사가 출고해야 할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은 트럭 170대 분량이었지만 실제로 납품한 건 단 13대분에 불과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거래처에선 물건이 없어 한동안 생산라인을 멈춰세워야 했다.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는 "트럭 시위가 있던 날 새벽 5시에 출근해 종일 뛰어다녔지만 제품을 출고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넘어 자괴감이 들었다"며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 공장이 멈춰선 것은 42년 회사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하필 신입사원 면접 날 시위가 벌어졌다. 봉쇄된 공장과 뒷집진 경찰, 당황한 지원자들을 보며 '이 나라에서 직원을 뽑고 기업을 일구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중략)

화물연대가 요구한 것은 계약이 해지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원래대로 일하게 하고, 화물연대와 합의 없이 늘어난 차량을 일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 계약된 물류사 3곳과 재계약하지 말고 거래 물류업체를 하나로 단일화하라는 요구도 했다. (중략)

회사 관계자는 "결국 화물연대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신들에게 물량을 몰아주고 이를 위해 비화물연대 기사들에겐 아예 일을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성우하이텍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더 이상 납품을 지연할 수 없었고, 공장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합의를 써주고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현장엔 경찰 병력 200여 명이 투입돼 있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에만 물량을 몰아달란 요구를 받아줄 명분도 없었고, 화물차 기사는 우리가 아닌 물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며 "그러나 길이 다 막히고 경찰마저 그들을 방치하는 상황이라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확인한 양측 합의서엔 화물연대 측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에게 원래대로 물량을 배정하되, 비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

2019. 3. 2.자 최종 수정, 2019. 6. 11. 18:24 방문)

다. 또 성우하이텍이 현재 계약 중인 물류사 3곳과는 계약하지 않고, 추후 화물연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들어줄 이유도, 들어줄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4명 복직과 비조합원 4명 배제 내용은 그런 결정이 이뤄진 과정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고, 화물연대가 물량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기사를 배제하거나 물류사 통합을 요구했다는 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⁸⁾.

다. 공공기관 상습적 불법 점거, 난입

(1) 사례 6

민노총 노조원 8명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의 경영진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불법파견한 것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의 처벌을 주장했다. (중략)

이날 대검찰청 점거 농성에 참석한 노조원은 이병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장과 김수익 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황호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등 민노총의 비정규직 노조 간부 등 8명이었다. 8시간 농성을 이어간 이들은 현재 경찰에 불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파견해 놓고도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한국GM 불법파견’,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정의선 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검찰청 로비에 앉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민노총 노조원 130여 명은 대검찰청 청사 정문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⁹⁾.

(2) 사례 7

아사히글라스지회 노조원 11명은 27일 오후 1시께 대구지검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했다. 이들은 “검찰이 불법 파견 관련 사건을 재수사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기소 여부 등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지검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 업무 시간이 끝난 뒤 경찰의 퇴거 설득에도 불복하고 오후 7시 현재까지 검찰청 로비를 점거했다. (중략) 아사히글라스지회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도 노조원 10여 명이 대구지검 본관 현관 출입문을 점거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범죄 목적이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노조원들의 검찰 점거 농성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0),11)}

8) <https://news.joins.com/article/23135179> (중앙일보 인터넷판, 2018. 11. 19.자 보도, 2019. 6. 11. 18:44 방문)

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8> (펜앤마이크 2018. 11. 14.자 최종수정, 2019. 6. 11. 22:30 방문)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2/807432/> (매일경제 인터넷판 2018. 12. 27.자 보도, 2019. 6. 11. 22:46 방문)

(3) 사례 8

29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4층. 지청장 사무실에서는 민노총 양경수 경기본부장이 전기 장판을 들고 2시간 넘게 잠자고 있었다. 민노총 경기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잡월드 분회 회원 10여 명은 지난달 26일부터 35일째 이곳을 점거하고 있다. 잡월드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정부가 나서라는 것이다.

노조가 불법 점거 중이지만 건물에 배치된 경찰은 한 명도 없었다. 정보 담당 경찰 한두 명이 가끔 왔다 간다고 한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에 노조원을 쫓아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에선 '기관이 감내할 부분도 있다. 폭력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청 공무원들은 매일 8명씩 당직조를 편성해 4개층을 24시간 자체 경비하고 있다¹²⁾.

(4) 사례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전국 고용노동부 청사를 무단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9년간 발생한 20건의 청사 점거사태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2017년 10월 이후 발생했다. (중략)

창원지청은 한국GM창원 비정규직지회가 한국GM의 파견근로자, 불법 파견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며 세 차례나 점거했다. 서울청 역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범외노조 취소 등으로 세 차례 점거당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문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청장실을 점거하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받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20건의 무단점거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3건에 불과하다. 이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2012년 11월 금속노조가 대전청을 점거한 1건뿐이다. 현 정부 들어 발생한 11건의 점거사태는 4건만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11) 지난 20일 대구지법은 올 초 대구지검 청사 1층 현관을 총 6차례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기소된 민노총 조합원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는 경찰관을 건어차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불법 시위에 적극 개입하는 경찰관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작년 3월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 진압 과정에 투입된 류모 경찰 중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가 경찰 호송차를 가로막고 체포된 노조원 점거 요청을 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받으면 자동 퇴직 처리돼 류씨도 경찰복을 벗었다. (중략)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작년 10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신윤균 서울청 제4기동단장(총경), 물대포 살수(撒水) 요원인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단장과 살수 요원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세 사람은 백씨 유가족에게 따로 6000만원을 배상했다. 한 경찰 간부는 "현장에 있는 말단 경찰에게까지 책임을 묻다 보니 예전처럼 '지휘권자인 내가 책임질 테니 명령을 따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8. 11. 30.자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30/2018113000272.html 2019. 6. 11. 23:48 방문)

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30/2018113000248.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8. 11. 30.자 보도, 2019. 6. 11. 23:53 방문)

(5) 사례 10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조합원 150여명은 이날 오후 김천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북지부 간부 5명은 김천시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30일 오후 김천시장실을 점거했다.

김천시통합관제센터에는 36명의 관제요원이 2년 기간제(계약직)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20여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지부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2년 계약이 끝나는 조합원들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천시는 기간제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200여명에 달해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관제센터 근로자들만 전환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1~2년 안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로 바꾸면 21명만 필요해 15명이 줄어든다며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김천시 전미경 자치행정과 교육후생계장은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 주장대로라면 지난 6월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19명이 그만뒀는데 이들은 완전히 배제돼야 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¹³⁾.

(6) 사례 11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조가 13일 오전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집무실을 40분간 기습 점거했다. 시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는 노조 측과 이를 막으려는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고성인 오가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집기가 부서지고 탁자가 뒤집히며 집무실이 아수라장이 됐다.

대우조선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변 시장 집무실을 예고 없이 난입했다. 변 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조합원들은 시장실 입구에 있던 비서진을 강제로 제치고 출입문을 부순 뒤 집무실로 들어갔다. 머리에는 '생존권 사수' 글귀가 찍힌 붉은색 띠를 두르고 '변광용은 거제를 떠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일부 조합원은 테이블을 뒤엎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책상과 의자, 서류를 던지고 집무실 곳곳에 매각 반대 스티커를 붙였다. 책상 위에 있던 시장 명패와 각종 서류, 보고서가 바닥에 널브러졌다¹⁴⁾.

(7) 사례 12

경남 진주의 최대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가 진주시청사를 불법 점거하려다 시청 직원 9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13) <https://www.yna.co.kr/view/AKR20181031127000053?input=1195m> (연합뉴스 인터넷판, 2018. 10. 31.자 보도, 2019. 6. 12. 00:28 방문)

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3233.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9. 3. 13.자 보도, 2019. 6. 12. 00:40 방문)

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0070.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 조합원 180여 명은 5일 오후 2시쯤 청사 지하 전용 승강기 보조 출입문을 부수고 청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이 청사 진입을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40여 분간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대형 유리창 2장이 깨지고 철제 서터문 일부가 파손됐다. 일부 조합원은 시청 직원을 폭행해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4명은 얼굴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진주시 한 공무원은 "노조원들이 힘으로 누르고 있던 유리창이 깨지면서 직원 3명이 심하게 다쳤다"고 말했다.

삼성교통은 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중 40%를 운행하는 최대 업체다. 노조는 지난 1월 21일부터 삼성교통의 지난해 경영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달라며 이날 기준 44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 "진주시가 파업에 대응해 빌린 전세버스 100여 대에 거짓 현수막을 붙였다"며 "시의 답변을 듣기 위해 청사에 진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진주시가 나서 삼성교통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경영 적자 보전과 최저임금 보장은 삼성교통 노사 간의 내부 문제"라며 "기업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발을 묶고, 세금 투입을 요구하는 노조 측에 시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 폭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기물파손에 대해 변상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¹⁵⁾.

(8) 사례 1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한국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홍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닷새째 점거한 한국GM 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해 "미국이면 테러감"이라는 말까지 써 가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노조의 카허 카셈 한국GM 사장 감금, 2012년 스테판 자코비 회장 방한 당시 폭력 사태 등을 언급하며 "노조가 대화할 의지가 없고, 자기들 생각밖에 하지 않아 이기적이다. 사과하지 않으면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8일부터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홍 원내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노조와의 대화에 응하라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¹⁶⁾.

(9) 사례 14

검찰은 올해 3월과 4월 세 차례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국회 진입 시도 때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 등 6명의 간부가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노총 간부들이 경찰이 설치한 철제 안전펜스를 뜯어내기 위해 밧줄을 준비하는 등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역할을 분담해 국회 진입을 계획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노총 내부 문건에는 국회 진입을 위해 집회에 참여한 간부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한다.

문건에는 3월 27일, 4월 2, 3일 각 날짜별로 간부들의 이름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집회에서 담당하

2019. 3. 6.자 보도, 2019. 6. 12. 00:56 방문)

1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13005012&wlog_tag3=naver (서울신문 인터넷판, 2018. 11. 12.자 보도, 2019. 6. 12. 01:23 방문)

는 역할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집회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민노총 간부들이 문건에 적힌 내용대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 측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맞춤형' 문건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노위가 4월 첫 주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법안 등 노동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민노총 관계자들이 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의 표시로 국회 진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진행하면서 이 기간 날짜별로 예상되는 체포 인원까지 염두에 뒀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체포 인원까지 예상했다면 집회가 불법적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중략)

민노총은 3월 2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일부 민노총 간부들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 벽을 밟줄로 잡아당기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날은 경찰의 저지선에 가로막혀 국회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후 민노총 간부 8명은 4월 2일 국회 안으로 들어가 본청 민원실 앞에서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민노총 일부 간부들은 4월 3일 경찰 안전펜스를 밟줄을 걸어 뜯어내고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일련의 국회 난입 시위에서 경찰관 55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¹⁷⁾¹⁸⁾.

라. 난동, 협박, 폭행

(1) 사례 15

자유한국당은 민노총과 일부 친여 성향 단체가 27일 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장 입구를 점거한 채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전당대회 방해 불법·폭력시위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민노총 등 수십 명이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몸싸움으로 선거단 출입구까지 봉쇄하며 불법·폭력시위를 벌여 전당대회를 방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이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폭력행위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¹⁹⁾.

17) <http://news.donga.com/3/all/20190529/95743755/1> (동아일보 인터넷판, 2019. 5. 29.자 보도, 2019. 6. 12. 01:34 방문)

18) 4월 3일 국회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며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해 7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게 한 것이 가까운 예다. 이들은 공공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먹 쥔 팔을 치켜들고 '개신장군' 행세를 하는 단체 기념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301073111000003> 문화일보 인터넷판 2019. 5. 23.자 사설, 2019. 6. 12. 01:39 방문)

19)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205> (대구신문 인터넷판, 2019. 2. 28.자 보도, 2019. 6. 12. 01:48 방문)

(2) 사례 16

울산지법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민노총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민노총 행태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주인도 없는 사무실에 10여 명이 단체로 밀고 들어갔다. 공단 직원들이 나가달라고 하자 폭언을 퍼부으며 화분 9개를 발로 차거나 벽에 집어 던져 산산조각 냈다. 직원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깨진 화분 조각을 던져 다치게 했다. 민노총은 그렇게 사무실을 두 시간 동안 점거하면서 중국 음식과 술을 배달시켜 먹기도 했다. 그래놓고 재판에서는 공단 측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성희롱을 했고 다친 공단 직원은 상처가 가벼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썼다. 반성은커녕 도리어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다. 범죄 집단이 따로 없다²⁰).

(3) 사례 17

한 모 민노총 조직국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실명을 간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불법 시위대에 거듭 해산명령을 내렸던 경비과장은 “한 씨의 선동이 너무 심해 공무 수행 차원에서 실명을 거론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당일 민노총 폭력으로 경찰관 3명은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어느 방송기자도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명환 위원장을 취재하던 또 다른 방송기자도 경찰서 마당에서 집단 폭행했다²¹).

(4) 사례 18

민노총은 또 여당을 상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6·13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성 경고까지 했다. 이미 21일부터 전국 지역본부를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 15곳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은 엄연한 위법이다²²).

(5) 사례 19

지난해(2017년)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노사 협상에서 민노총 산하 공사노조 간부가 갑자기 공사 측 교섭위원에게 뛰어 들었다. 이 노조 간부는 공사 측 위원에게 목살을 잡고 바닥에 누인 뒤 목을 졸랐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그는 폭력을 계속했다²³).

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2/2018121203304.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8. 12. 13.자 사설, 2019. 6. 12. 01:51 방문)
 2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001073911000001> (문화일보 인터넷판, 2019. 4. 20.자 사설, 2019. 6. 12. 02:01 방문)
 22) <http://news.donga.com/3/all/20180522/90198741/1> (동아일보 인터넷판, 2018. 5. 23.자 사설, 2019. 6. 12. 02:20 방문)
 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7/2018101700191.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8. 10. 17.자 보도, 2019. 6. 12. 02:30 방문)



3. 공권력 무력화

가. 개요

민노총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범인도피 및 압수 수색 저지도 드물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형물 설치를 저지하던 부산시장은 민노총이 함께 한 집단행동에 굴복하여 사과하고 위 조형물을 반환하는데 이르렀으며, 불법 파업을 막아야 할 울산시장은 민노총에 동조하여 삭발식을 거행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민노총은 가히 국가기구를 포획하여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실례들

(1) 사례 20

대구의 한 골프클럽에서 폭력 집회를 벌인 민노총 조합원 12명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합원들은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12명의 조합원 중 일부는 폭력 집회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감형 사유로 “해고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²⁴⁾.

24) <http://news.donga.com/3/all/20190603/95814853/1> (동아일보 인터넷판, 2019. 6. 3.자 보도, 2019. 6. 12. 02:40 방문)

(2) 사례 21

[리포트]

붉은색 조끼를 입은 남성이 다가옵니다.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더니 뺨을 때립니다. 경찰이 말려보지만, 남성은 공무원을 또 때립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경북 김천시청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 58살 유모 씨가 김천시 공무원 37살 김모씨를 폭행했습니다.

[남추희 / 목격자]

"화장실도 못쓰게 하나 하면서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 주먹이 날라와가지고..."

김천시가 화장실 사용을 통제한 것은 지난달 30일에도 민노총 조합원이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시청에 들어와 시장실을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김천시과 민노총은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지난 8월부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점거 사태를 우려해 집회 전날 민노총에 간이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천시는 폭행사태까지 발생하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노총 경북지부를 고소했습니다.

(3) 사례 22

불법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 취재진에 포착된 장 위원장은 건물 옥상에서 태연히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경찰이 위치를 몰랐을 리가 없다. 경찰이 장 위원장의 소재를 진작 파악하고도 구속영장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건설노조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한 장 위원장은 올해 말 자신의 임기를 마친 뒤 별을 받겠다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 범법자다. 그는 과거 저지른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기도 하다. 사실상 법 위에 있는 셈이다. 마포대교 점거는 퇴근시간대 서울 시내 교통대란을 야기했던 것은 물론, 18명의 부상자까지 냈던 불법 폭력시위다. 부상자 중 15명이 경찰이다²⁵⁾²⁶⁾.

(4) 사례 23

경찰은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전 사무총장은 2년여간 민노총 사무실에 머무르며 경찰의 체포를 피했다. 경찰은 민노총 측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전 사무총장이 경찰에 검거된 때는 2017년 12월이다. 그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

25) <http://news.donga.com/3/all/20180328/89354592/1> (동아일보 인터넷판, 2018. 3. 28.자 보도, 2019. 6. 12. 03:00 방문)

26)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장옥기 민주노동조합 건설노조 위원장이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 위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신고하지 않은 길로 행진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59789_24698.html 2019. 4. 22.자 MBC 보도, 2019. 6. 12. 03:05 방문)

거하고 자신에 대한 수배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는 열흘 뒤 스스로 당사를 나와 당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²⁷⁾.

(5) 사례 24

정필모 부사장이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그 이름도 휘황찬란한 숙청위원회의 위원장이 돼서 무소불위의 활동을 하다가 직원들 이메일 불법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마침 경찰은 10월 23일 이 건으로 정필모가 위원장으로 있는 진미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언론노조원들이 저지하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냥 철수했다²⁸⁾.

(6) 사례 25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전교조(민노총의 연대단체)는 현직 교사가 아닌 사람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것"이라며 "현직 교사가 노조전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불법이자 직무유기이며, 법적으로 따졌을 때 징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청와대나 교육부도 (법외노조의 노조전임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거나 말거나 소신대로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법치가 붕괴된다. 불법에 대해 교육부가 나서서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고서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략)

지난 2월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는 총33명이었다. 전국 전교조 16개 지부 소속 27명, 본부 6명이다. 1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 조합원 22명이 공식적으로 노조전임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용한 지역은 서울·인천·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부산·경남 등 12곳으로, 남은 곳은 경기·대구·대전·경북·제주 등 5개 지역이다²⁹⁾.

(7) 사례 26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열린 시민마당 인도에 설치한 불법 천막 3개동에 대해 종로구청이 철거 명령을 내리자 보란 듯 서울시 관할의 세종로 소공원 안에 텐트를 재설치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시설 철거에 나섰던 구청 공무원은 노동단체 고소로 되레 검찰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

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4/2019012402138.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9. 1. 24.자 보도, 2019. 6. 12. 03:10 방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8)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26#07AG> (이코노미톡뉴스, 2018. 11. 5.자 칼럼, 2019. 6. 12. 03:21 방문)

2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01/2018080100175.html> (뉴데일리, 2018. 8. 1.자 보도, 2019. 6. 12. 03:32 방문)

르고 있다³⁰⁾.

(8) 사례 27

부산시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기습 철거에 반발하는 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조합원과 '적폐 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위원회)' 회원 등 30여 명은 15일에 이어 16일에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로비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로비 한가운데 전기장판, 매트 등을 깔고 밤을 새웠고 출근 시간에 맞춰 "오거돈 시장은 사죄하라" "노동자상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튿날 불법 점거가 이어지자 부산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1층 회의실에서 열 예정이었던 부산 지역 기관장 회의 장소를 12층 회의장으로 변경했다. 부산시교육감, 부산고등·지방법원장, 고·지검장 등 110여개 기관의 수장이 모여 지역 현안들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다. 이날은 기관장 59명이 참석했다.

농성 시위대는 이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후 1시 50분쯤 12층 회의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무실 구역으로 연결된 보안 게이트를 뚫으려다 경찰·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시청이 시위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1, 2층 일부 출입구 셔터를 내리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해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원인 김모(57)씨는 "시청 로비가 난민촌 같았다"고 했다³¹⁾.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과 함께 노동자상 반환과 원탁회의 구성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중략)

이와관련해 오거돈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노동자상 건립위원회 여러분들과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마음을 모은 시민,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친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³²⁾.

노동절인 오늘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한 시민단체가 어젯밤 기습 설치를 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이들은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옆으로 노동자상을 옮기려다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지당했고,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교 공관 앞 노동자상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도 노동자상 설치를 시도할 걸로 보여, 다시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³³⁾.

3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8/585459/> (매일경제 인터넷판, 2017. 8. 31.자 보도, 2019. 6. 12. 03:43 방문)

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6/2019041603135.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9. 4. 16.자 보도, 2019. 6. 12. 03:56 방문)

32)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143> (BBS뉴스, 2019. 4. 17.자 보도, 2019. 6. 12. 04:24 방문)

33)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594010_22669.html (MBC뉴스, 2019. 5. 1.자 보도, 2019. 6. 12. 04:18 방문)

4. 사업체의 지배

가. 불법 파업

(1) 사례 28

28일 저녁 7시 경북 경주시 현곡면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 김모(35)씨가 사람 키만큼 쌓여 있는 택배 상자 더미를 뒤지다 한숨을 크게 쉬었다. 김씨는 "다음 달 가족 여행을 가서 쓸 용품을 주문했는데 기다리다 지쳐 직접 찾으러 왔다"고 했다.

이 터미널은 경주 전역에 배달될 CJ대한통운의 택배 물건을 받아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는 곳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 노조) 700여 명이 지난 21일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라'며 파업에 나선 뒤 이 지역 택배 배송은 일주일 넘게 사실상 마비됐다. 일부 노조원은 터미널 입구를 막고 회사 측이 대체 차량을 투입하는 것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28일 현재 경주터미널에도 1만5000여 개의 상자가 발이 묶여 있다. 경남 창원, 울산,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³⁴⁾.

CJ대한통운 측은 "본사가 택배기사를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라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계약을 체결한 형태이기 때문에 본사는 교섭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³⁵⁾.

(2) 사례 29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반발하며 1년간 릴레이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보장성 확대, 재벌 독점적 업종·산업정책에 노동 개입력 증대 등과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 제도화 △사법개혁 투쟁 강화 △범국민적 평화운동 등 근로자 권익 보장과 무관한 파업 명분을 내걸어 사실상 정치파업 예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³⁶⁾.

(3) 사례 30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노조원의 실질적인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월 24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발표하고서도, 각종 협회 별로 총회나 토론회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업무에 복귀한 직원조차도 간부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있다. 적폐 간부이기 때문이란다. 급기야 영상취재부의 한 간부는 자신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맘대로 활동하는 기자가, 시간외 수당에 대한 결재를 해주지 않는데 대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3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9/201811290028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8. 11. 29.자 보도, 2019. 6. 12. 04:37 방문)
 3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1/745555/> (매일경제 인터넷판, 2018. 11. 28.자 보도, 2019. 6. 12. 04:40 방문)
 3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0901070221320001> (문화일보 인터넷판, 2019. 1. 9.자 보도, 2019. 6. 12. 04:46 방문)

근무 지시를 받지 않겠다면서 연락도 하지 않는 직원이 수당은 받아야 하겠으니 결재를 해 달라고 협박하는 이런 분위기를, 또 5개월 동안 파업을 해놓고 근무평가 점수는 잘 달라고 성명서까지 띄우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게다가 일부 간부는 오히려 노조 편을 들어 보직자들의 사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니 과연 무법천지, 해방구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중략)

2017년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10일부로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 했다면, 아무리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 이후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은 불법임이 분명하다.

교섭대표 노조와 별도로 파업을 하는 개별노조의 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감사실에서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인가.

감사실마저 언론노조 눈치를 본단 말인가.

2012년도에 언론노조KBS본부가 105일의 파업을 했을 때는 조사해놓고 지금은 왜 가만히 있는단 말인가.

도둑이 들려니까 개도 짖지 않는다더니, 회사가 망가지려고 하니까 기강을 세워야 할 부서까지 언론노조 눈치를 보는가 싶다. 정말 큰일이다³⁷⁾.

나. 고용 세습, 채용 비리, 정규직 불법 전환

(1) 사례 31

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채로 뽑는 한 직장에서 2000명 가까운 임직원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나 신(新)고용세습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져 지난해 출범한 서울시 산하 공기기업이다. 씨족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벌어졌으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일자리 약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22일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으로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중략)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있다면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며 “악의적 목적에 따라 언론이든 정당이든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노동조합이 비리와 관련된 것처럼 운운하는 형태는 마땅히 자제돼야 하고 규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³⁸⁾.

37)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42> (미래한국 인터넷판, 2018. 1. 31.자 보도 중 KBS 공영노조 성명서 일부, 2019. 6. 12. 04:58 방문)

38)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3> (인사이트코리아, 2018. 10. 22. 자 보도, 2019. 6. 12. 05:06 방문)

(2) 사례 32

#1.'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금호타이어, 민주노총 단체협약)
 #2.'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현대자동차, 민주노총 단체협약) (중략)

민주노총 등이 대기업과 맺은 고용세습 조항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이 같은 단체협약 조항 역시 당연 무효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에 소극적이다.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694곳에서 세습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지난 26일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체협약 상 고용 세습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용비리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안을 합의한 적은 있지만, 이후 논란이 많이 돼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며 "사실상 폐기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3) 사례 33

인천공항 직원 일부가 "채용 방식 변경과 A씨의 입사 배경에 민주노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집행부가 전직 간부의 아내인 A씨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A씨 채용에 반발한 직원들이 회사 측에 "갑자기 인성 검사를 없앤 이유가 뭐냐"고 묻자 회사는 "단기 계약직 채용에 인성 검사까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으로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타부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본사인 인천공항공사도 A씨 채용 과정에 논란이 인 사실을 알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뿐 아니다. 인천공항에서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도 민주노총 간부의 아내를 초고속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의 아내 B씨는 지난 2010년 이 업체에 입사했는데, 입사 당시 직급 '사원 4'에서 '사원 1'로 함께 들어온 동료들보다 9년 빨리 승진한 것이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할 때 직급이 높으면 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후에는 민주노총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³⁹⁾.

5. 기타 불법행위

(1) 사례 34

최근 철근콘크리트업계와 건설노조의 새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 절차가 개시되면서 기존 임단협에 포함됐던 독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0/2018102000177.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8. 10. 20.자 보도, 2019. 6. 14. 00:28 방문)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조항과 부당노동행위인 조합원 채용 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전국의 건설노조들은 철콘업계에 임단협 교섭요구를 해왔고 9일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했다. 수도권 업체들에게 총 11개 노조가 교섭요구를 해온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부당노동행위① 노조비: 업계 관계자는 “노조전임비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퍼지면서 조직수가 11개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A현장에서 총당된 돈으로 B현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채용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단협에는 유급근로시간 면제 조항을 담았고, 실제로 현장에선 노조원을 한명이라도 투입한 노조 한 곳당 1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노조전임비를 받기 위해선 전임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어야 하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노사 고충처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에 보고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두 조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부당노동행위② 노조원 채용: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약의 조합원 채용조항으로 인해 타워협동조합 이사장은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민노총의 힘에 못 이겨 체결한 사항을 두고 사측이 처벌 받게 됐다”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황당하게도 민노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같은 내용을 요구 조건으로 내밀었다고 덧붙였다⁴⁰).

(2) 사례 35

[앵커] 민주노총과 관련한 집중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민노총의 한 실천단원이 고백을 했습니다.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일터인 건설현장보다 집회에 더 많이 나가도 급여는 제대로 다 받았다는데요 먼저 김하림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해온 30대 A씨.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일감도 구하기 쉽고 임금도 더 받는대서 2015년 노조원으로 가입했습니다.

A씨 "단가도 다른 데보다 높다고 하기에 가입한거죠."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소속 실천단, 일종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모범조합원상까지 받았습
니다. 하지만 실천단 활동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일터보다 집회에 더 많이 나갔고, 집회만 가면 일을 안해도 급여는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A씨 "현장에 (한달 근무일 20일 중) 단 12일 밖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당 나옵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현장에 있다가도 '집회 있습니다' 하면 망치자루 집어던지고 '팀장! 나 (집회)나가!...'"

40)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80> (대한전문건설신문, 2019. 4. 22.자 보도, 2019. 6. 12. 05:34 방문)

이석기 석방 집회 등 정치 집회와 다른 사업장 활동에도 동원됐습니다.

A씨 "외국인 쫓아내고 불법 채증해서 고발하고.. 그냥 XX집단입니다."

오히려 집회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 "(집회 안 가면 안되나요?) 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에 가야 하고 그 돈(일당)을 받기 위해선 집회에 가야 하고."

해당 지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 경기지부 관계자 "(본부에서) 아예 하지 말라고 내려왔어요. A씨는 민노총 활동이 기대와 달라 3년만에 탈퇴했습니다."

A씨 "(왜 나오셨어요?) 바꾸려고 나왔죠."

TV조선 김하림입니다⁴¹⁾.

(3) 사례 36

17일 오후 2시 반께 서울 신도림동 복합상가건물인 디큐브시티 앞.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외국인은 사방에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에 인상을 찌푸렸다. 호텔 로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확성기 소음은 디큐브시티 15층에 마련된 공유형 스튜디오 공간 안까지 들어왔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일대가 약 40일간 시위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시위를 벌이는 쪽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노조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곳에 있는 대성산업을 상대로 장기간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두문 전국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원도급 업체인 대성물류건설이 지난해 3~4월 장비대금 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성물류건설 모회사인 대성산업은 굴착기 사업자 등이 대성물류건설의 1차 하도급 업체인 흥업이엔씨와 계약을 맺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장비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흥업이엔씨를 피고로, 대성물류건설을 제3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들어오자 대성물류건설은 절차에 따라 흥업이엔씨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잔금 2억4800만원은 법원에 공탁했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공탁에 참여해 장비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법 절차에 참

4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4/2019012490151.html (TV조선, 2019. 1. 24.자 보도, 2019. 6. 12. 05:58 방문)

여하지도 않고 민주노총의 힘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개입하면서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흥업이엔씨와 장비 업자인 나 모씨의 계약 관계를 원도급 업체인 대성물류건설이 무조건 책임지라며 불법채권추심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0일 가깝게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시위 초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4일간 대성산업 본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최근에는 김영대 회장 자택 앞까지 가서 확성기 시위를 벌여 주변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신고된 합법적 시위"라며 현장을 지켜볼 뿐이다⁴²⁾.

(4) 사례 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채성부처 의심하게 하는 행태를 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e북 형태로 지난 3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퍼낸 ‘평양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 2018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북녘 이야기’는 북한 정권 주장을 복창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22일 보도됐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설명하며 ‘미국은 북핵 소동을 벌였고, (북한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미국은 북을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고, 정치군사적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했다. 북한의 고립은 핵·미사일 개발로 자초했는데도, 되레 이를 경고한 미국을 탓했다.
 ‘북핵 소동’까지 북한 아닌 미국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친북반미(親北反美) 행태의 노골화로 볼 수밖에 없다⁴³⁾.

(5) 기타 사례들

민노총은 광화문 등에 불법천막을 설치하였고(사례 38)⁴⁴⁾, 광주에서는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뒤 그것을 제거하려는 광주시가 오히려 더 찢찢 매게 만들었습니다(사례 39)⁴⁵⁾.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거부하면서, 노동문제와도 전혀 무관한 정치·외교 등의 국정사안에까지 간섭하는 투쟁을 벌이는 등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사례 40)⁴⁶⁾. 국감장 앞에서 불법으로 시위하고(사례 41)⁴⁷⁾, 집회 후의 쓰레기를 방치하며(사례 42)⁴⁸⁾, 경찰 호송 중에

42)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01/38705/> (매일경제 인터넷판, 2018. 1. 17.자 보도, 2019. 6. 14. 00:32 방문)
 4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2201073111000001> (문화일보 인터넷판, 2019. 4. 22.자 보도, 2019. 6. 12. 06:09 방문)
 4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8/519458/> (매일경제 인터넷판, 2017. 8. 2.자 보도, 2019. 6. 12. 20:44 방문)
 45)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397> (남도일보 인터넷판, 2019. 6. 4.자 보도, 2019. 6. 12. 20:47 방문)
 4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59117#csidx7cab3297181a308ad2789219c278bc0> (이투데이, 2019. 5. 24.자 사설, 2019. 6. 12. 20:56 방문)
 47)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36421_21408.html (MBC 뉴스, 2017. 10. 13.자 보도, 2019. 6. 12. 20:50 방문)
 48)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73> (뉴스웍스, 2017. 12. 1.자 보도, 2019. 6. 12. 20:51 방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사례 43)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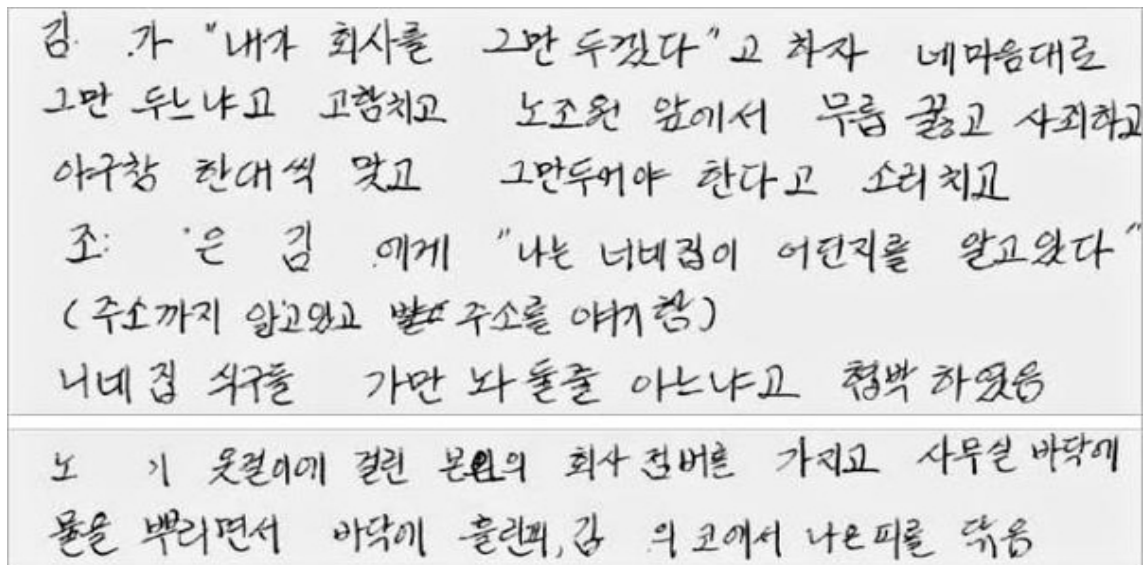
6. 유성기업 사태

-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는 사태의 전모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김 상무가 교섭을 회피해서 면담을 요청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체포조를 운영하고 현상금 1000만원도 내걸어 그를 잡으려고 노조원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노조원들은 작년 11월 22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 상무를 발견, "어딜 도망가" "김OO 저XX 여기 있다" 등을 소리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김 상무가 노조원들을 피해 사무실로 도망치자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김 상무에 대한 무차별 폭행이 1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회사 계속 다닐거냐" "아구창 한대씩 맞고 가야 한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김 상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또 컴퓨터 모니터를 던지거나 김 상무의 가족과 주소를 언급하며 겁도 줬습니다. 옷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채로 김 상무는 40여분 동안 더 감금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총 12주)를 입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상무는 당시 폭행으로 코뼈가 뿌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됐습니다.



노조원들은 김 상무 폭행 당시 경찰의 현장 진입도 막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30~40명의

4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8/201906080117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9. 6. 8.자 보도, 2019. 6. 12. 20:53 방문)

노조원들은 "경찰이 왜 출동했느냐" "로프줄 타고 내려오면 끊어버릴 거야"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영장을 받아오라며 경찰의 진입을 막아세웠습니다. 폭행에 가담했던 조씨는 "경찰 중에 내 얼굴을 아는 놈이 있다"며 "몸 사리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함부로 못 하고 있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구급대원 등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수십분 대기했고, 노조원들이 해산한 후에야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조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일뿐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녹음 등 수집된 증거들을 미뤄볼 때, 사전에 (피해자) 체포를 공모하고 범행 현장에서 서로 상해를 공모한 점도 인정된다"며 "경찰 출동 이유를 잘 알았음에도 다수 노조원들의 위세를 이용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노조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⁵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노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중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투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명분 아래 그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의견이 다른 경우 서슴없이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기를 반복해 왔다"며 "폭력적인 행위를 선택하는 순간 그에 따르는 엄격한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은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⁵¹⁾.

7. 현대중공업 사태

가. 기업결합 사안에 파업 자체가 불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민주노총이 W도를 넘는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경총은 "민주노총 현대중

5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2721.html?related_al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9. 6. 10.자 보도, 2019. 6. 12. 07:06 방문)

5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1991.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9. 6. 10.자 보도, 2019. 6. 12. 07:08 방문)

공업지부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에 반대하면서 파업에 돌입했고 이번 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심각한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기업결합 과정에서 회사측이 고용안정과 단협 승계까지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조가 기업결합과 물적분할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⁵²⁾.

나. 현대중공업 본사 강제 진입 시도하며 경찰관 총36명에 치아 파손 등 상해를 입힘

지난 22일 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 노조가 회사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연 뒤 현대중공업 사무소 진입 시도 및 경찰을 폭행해 현장에서 검거된 12명 중 10명이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경 2명·경찰 3명은 치아 골절, 치아 흔들림, 손목 인대 손상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경찰들도 찰과상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위에는 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은 오후 4시경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는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이었는데, 조합원 100여 명이 경찰통제선을 넘고 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헬멧과 방패를 빼앗으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인권보호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48시간 이내 석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치아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었지만 민노총 조합원을 24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비난 여론이 빚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스스로의 공권력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의미에서입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는 “민노총은 공권력을 파괴해도 석방됩니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다면 변호사보다 민노총에 연락해야 합니까? 국수본,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경찰, 검찰 상급기관 민노총이 있는데...”, “대한민국 서열 1위 민노총”, “일반시민들한테는 개XX을 하면서 민노총한테는 짝소리도 못하고 매일 맞는 XX”, “이런 경찰이 무슨 독자 수사권한을 달라고?”, “이런 XX들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단다.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누구는 잡아가고, 누구는 조사도 안하고, 누구는 풀어주는 XX들을 어떻게 믿냐?”, “저렇게 무능한 경찰이라면 얻어 터져도 싸다. 석방시킨 경찰을 고발해라”, “국회의원, 노동자 그 누구라도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폭도다. 그들의 권리는 법과 의무를 지켜야 보장된다. 권리도 의무도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등의 비난이 빚발치고 있습니다⁵³⁾.

52) <http://www.fnnews.com/news/201905291340563365>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판, 2019. 5. 29.자 보도, 2019. 6. 12. 07:16 방문)

다. 주주총회장 불법 점거, 진입 강제 저지, 한마음회관 파손

지난달 31일 오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1층 공연장을 둘러보던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의 불법 점거를 풀고 나간 후 회관은 아수라장이 돼 있었습니다. 설치된 좌석 420개 중 200개가 훼손됐는데, 이 중 100개는 통째로 뜯겨 나갔고, 조명은 깨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루 5000명의 울산 시민이 이용하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노조가 빠져나간 자리는 원래 용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특히 주총장으로 쓰려던 1층 공연장의 훼손이 가장 심했습니다. 대형 거울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대기실 화장실에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습니다. 바닥에는 소화기가 내동댕이쳐져 있었습니다. 노조는 뜯어낸 좌석 100개 중 일부를 창문 막이로 썼습니다. 수십 개를 높이 쌓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공연장 바닥에는 붉은색으로 '승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방범카메라는 대부분 파손됐습니다. 회관에 설치된 방범카메라 20대 중 18대가 아예 뜯겨 나가거나 깨져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외부에서 회관 내부 상황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⁵⁴⁾.

라. 동료 직원 폭행

현대중공업 경비업무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동료 직원이 노조원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봤는데 오토바이 헬멧,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유유히 범망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7일 주총 예정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해 경비 등 1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청원자는 "노조 집행부 주도로 조합원 500여명이 회사 본관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관 대형 유리문이 박살났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동료 여러 명이 눈이나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⁵⁵⁾.

사측은 지난 3일 자료를 통해 "울산 본사 내에서 일부 파업 참가자들이 공장 진입을 막는 회사 생산팀장을 폭행했다"며 "파업 참가자들이 공장에 진입하려 해 생산팀장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 동부 경

53)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20> (일요서울 인터넷판, 2019. 5. 24.자 보도, 2019. 6. 12. 07:29 방문)

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2/2019060201325.html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9. 6. 2.자 보도, 2019. 6. 12. 07:37 방문)

5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311035089430?did=NA&dtype=&dtypecode=&prnewsid=> (한국일보 인터넷판, 2019. 5. 31.자 보도, 2019. 6. 12. 07:44 방문)

찰서는 같은 날 또 다른 파업 참가자 2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단별로 흩어진 파업 참가자들이 자재창고 인근 도로를 오토바이로 봉쇄하고, 오토바이 경적시위를 벌이는 등 회사 곳곳에서 생산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사측은 밝혔습니다⁵⁶⁾.

마. 변경된 주주총회장 침입, 난동(벽체 등 시설, 기물 파손)

3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 벽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곳은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장으로 쓰여졌는데 주주총회장이 변경된 것을 안 노조원들이 뒤늦게 난입하여 체육관 벽면을 파손하는 등 아수라장을 만든 것입니다. 노조는 뒤늦게 임시주주총회장에 들어와 무효를 주장하며 의자 등의 집기류를 쓰러뜨리고 체육관 벽면마저 뚫어버렸습니다⁵⁷⁾.

바. 실사단의 회사 진입 강제 저지

노조측의 강력한 저지로 현대중공업 실사단은 지난 5월 26일에 이어 지난 3일에도 대우조선해양 진입에 실패했다. 지난 3일에는 두 차례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노조측과 2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비협조로 5시간만에 거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실사단 관계자는 “현장 실사는 기업 인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노조측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실사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 결어

민노총의 법치 파괴적 행태는 꾸준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박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 파괴적 강도는 한층 더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민노총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질서 파괴, 공권력 무력화, 사업체 지배 등의 행동방식은 법치 파괴의 수준을 넘어 국가 질서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power of the powerless)’에 바탕하여 출발한 노동조합이 ‘힘센 자들의 힘(power of the powerful)’을 휘두르는 조직으로 변해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56)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004> (중앙일보 인터넷판, 2019. 6. 5.자 보도, 2019. 6. 12. . 07:49 방문)

57) <http://news.donga.com/3/all/20190531/95790772/1> (동아일보 인터넷판, 2019. 5. 31.자 보도, 2019. 6. 12. 07:58 방문)

노동조합 혹은 그 연합체도 ① 국가나 국익과 무관하게 존립할 수 없고, ② 공동체의 경험과 의논을 통해 성장해 가는 법치의 한계 내에 있어야 하며, ③ 정부와 마찬가지로 책임의 대원칙 아래 움직이는 협치의 주체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상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위협세력이자! 우리국민 차별세력인 “노동조폭”을 응징해야합니다!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일거리가 생겨납니다.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장경제제도의 고용이지요.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입니다.
이들은 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지요
이때 참고 제일 순위가 고용의 범위와 깊이이며 그 직군의 노동유연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이 근로계약의 질량을 얼마나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느냐를 가늠하여 사업확장을 결정합니다. 예컨대 불황을 맞아 제품 생산을 줄일 경우 근로자 채용도 그만큼 감축할 필요가 있지만, 노폭의 반발 등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면 노동의 유연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인력 감축대신 노동자 1인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노동의 유연성은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 합니다.

기업은 당연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환경을 좋아하고, 반대로 (노폭들의지원 하에 있는)근로자들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직된(유연성이 낮은) 노동시장을 원하겠지요.

기업가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와 일거리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변화를 가장 중요하고 가로막는 게 노조(노동조폭)세력입니다. 그래서 노폭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한민국 위협세력“입니다.

근로자는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언제든 회사 때려치우면서 왜 회사는 밥값도 못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그만두게 하고 더 좋은 인력을 쓸 수 없습니까?

기업인과 근로자 사이에 왜 노폭이 끼어들어서 이제는 경영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세상이 된 것입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가족처럼 지내던 친 기업형근로자들 일자리는 없어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망해갑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노폭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기업 친노조 더불어 노조랑 얹어 진당” 출몰이후 백주 대낮에 회사 경영진을 죽도록 패고 정부기관에 쳐들어가 난장판을 벌여도, 경찰들 팔목을 부러뜨려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실행 이후 100만 민노총이 되었고 이 노폭들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관행적으로 매달 지급해온 월레비를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무런 고용 관계도 없이 매달 400만원씩 타워크레인 급행료 명목으로 뺨 뜯어 가던 노폭들의 협박을 때려 부수기 위한 업체들의 단체행동입니다 우리 (이덕로는) 협동조합에서는 이 노폭 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검찰에 범죄단체조직 공갈 협박죄로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부산항운노조관련 비리는 항운노조가 항만 일대에서 하역 업무에 관한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갖고 조합원 채용 및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 성격까지 갖는 어이없는 행태로 인해 ‘취업 후 노조 가입’이 아니라 ‘조합 가입 후 취업’이라는 “조폭 특유의 불법 연고권”을 주장하며 발을 담근 후 뺨 뜯어 가는 수법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범죄단체로 보고 우리사회 위협세력으로 차별해서 범죄단체 조폭 프레임으로 묶어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소득주도 어찌고 하면서 애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가지만 비틀어대다 보니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못 버텨 결국 알바 등 서비스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소위 “중소자본가들의 무산 계급화”를 진행하고 있는 오리지날 종북 사회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동해방 전사들의 거침없이 직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노폭의 (조직원) 비호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월급 받아서 자기 나라로 보냅니다.(최소의 식품도 자국에서 가져다 처 묵고있슴)

현재 민노, 한노 계열 9개 도합 11개 건설관련 노폭들이 철콘협회와 단체교섭 중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폭들이 전투력 최고 갑인 건설과 운수노조를 핵심 동력으로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슬슬 알피엠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 노폭들의 조합원들이 80~90% 외국인 근로자들로 조직되었고 특히 철콘분야 노폭들은 조선족(한국서 돈벌어서 중국으로 튀는 절대로 국적을 바꾸지 않는 중국념) 오야지들을 잡고 철콘회사 조져서 50% 일거리 확보 후 그걸 미끼로 조선족 근로자들을 통제 조정 (노동조폭 집회 동원 등) 하고 있지요.

최근 “노조랑 더불어 세세당”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학위 취득시 국적을 주자며 입법 추진중이며 이미 인권팔이 귀족 노퍽들은 노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고 받아들이고 있음 ~~~(외국인 체류 관련법에는 취업 불가)

과연 우리 중소기업에 뿌리산업에 취업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노퍽들 노조설립 사정권에 언제 들어갈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건설관련 업종단체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뿐 아니라 서비스 제조 소상공인 등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에서는 "노퍽응징보복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 권한은 기업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건설현장의 인력채용은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노조원의 업무 능력은 비노조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조원을 고용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일당 외에도 노조에게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많아 결국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신규현장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 하나같이 자기네 소속 조합원을 의무적으로 (민노총은 50% 를)고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조직이 제일 큰 노조는 자기네 노조원을 먼저 고용하게 압박한 다음 타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노조별로 한 팀씩 채용하면 제일 큰 노조는 다른 팀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고용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조합원을 더 고용 하라며 새벽부터 현장 출입구를 막고 출근하는 근로자를 불법으로 검문하고, 레미콘 차량까지 막아 레미콘이 굳어서 뒤돌아가게 만듭니다.

노조원을 채용해도 일을 잘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비노조원이 5일이면 하는 작업을 노조원은 10일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량이 50~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일이 없어 며칠 쉬라고 해도 노조원들은 무조건 출근해서 놀면서 일했다고 회사를 압박해 일당을 갈취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끼리 모여 시위한 날도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현장에서는 자기네 노조원을 고용해달라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전임비만(일하지 않고 노조원 관리자 명목) 수천만원 건네는 곳도 있습니다. 노조원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안 쓰고 갈취당하는 것이 손해가 덜할 뿐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노조들의 현장 “깡판”이 멈추기 때문에 업체들은 울며 겨자를 먹는 것입니다.

현장 노조 팀마다 노조 전임비 매월 백여만원을 포함해 이것저것 일하지 않고도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가 막대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막힌 현실은 건설현장에 (공갈쳐서 뺏 뜯어가는 구조로)신생 노조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 명함을 들이밀고 협상을 요구하는데, 진짜 노조원인지, 사기꾼인지, 협박꾼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업체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안들어주면 (날마다 드론 같은 최신 촬영 장비까지 동원하여 사진 박아서 고발하여 수억대 과태료 먹게함)

그래서 회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노폭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거나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은 노조에게는 뇌물을 주고 있고, 노폭들은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아주 손쉽게 회사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폭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권한은 노조에게 뺏겼고 책임만 잔뜩 떠안고 있습니다.

고용뿐만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도 모두 노조에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체결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얼마 일하지도 않은 초보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높은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시간도 숙련공 기준도 모두 그들의 것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달라고 해서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로하고 하루 일당을 줬더니 5시까지 일한다면서 1.5배의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일 잘하는 노조원을 현장에 투입시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을 잘 못하는 노조원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노조가 무차별적인 진정·고소·고발로 회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드나들고 여러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시뮬거리를 찾기란 쉽습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환경조치 위반, 불법 인국인력고용, 건설업 취업교육 미이수자 등 다양한 법 위반 증거를 수집해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전 현장을 고소·고발하고 근로감독을 나오게 해 현장을 마비시켜버리는 더 큰 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장 쓰레기통까지 뒤집습니다.

그들의 도가 넘는 행동에 사업주가 신고를 해도 정부와 경찰은 회사에게만 엄격하게 대응하고, 노조에 대해선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현장 출입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멀리서 방관만하다가 돌아갑니다.

노조는 회사가 자기의 뜻을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장입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는 물론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로를 막고 독서실 앞에서도 하루 종일 장송곡 틀어놓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건디 못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서에서는 합법적인 시위라며 오히려 업체에 빨리 해결하라고 종용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회사한테 해결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으므로 누구나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불법에 이르면 제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노조는 항상 ‘불법외국인 퇴출’, ‘안전관리 철저’ 등을 내세워 시위를 하고 있으나 진짜 목적은 오직 ‘노조원 채용’입니다.

또한 노조원들은 공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 잘하는 비노조원들을 상대로 태업(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정의행위)을 조장하기도 하고, 노조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조들은 모든 현장의 인력을 자기네들 노조원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네 조합원만 근무시키고 싶으면 자기들이 직접 건설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비노조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결국 모든 피해는 건설사를 넘어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노조의 적폐행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아파트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급하게 공사를 하게 되어 품질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건설현장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 것은 정부와 경찰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노조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현장을 멈춰가며 회사는 쥐 잡듯이 잡으면서, 회사가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횡포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수수방관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들이 관청으로 몰려가 집회하고 시끄럽게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곤혹스럽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일당 20만원 이상의 고임금에도 일이 고되어 내국인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내국인의 기피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고, 고용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거나 건설업 취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한두 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회사는 곧바로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악덕업체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기에 노조들까지 횡포를 부려 업체들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든 절박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귀족노조 감싸기와 경제 파탄의 미필적 고의

김동근 청사진 운영위원

1. 문재인 정권의 범노동계 감싸기와 귀족노조의 폐해

문재인 정부의 귀족 노조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귀족 노조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경제공동체”이자 “좌파독재공동체”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집단도 바로 귀족 노조였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귀족 노조는 공무원 노조를 필두로 해서 경제사회의 곳곳에서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귀족노조의 행패와 폐단이 남긴 경제적 손실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럽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스웨덴 스톡홀름 샬트세바덴 그랜드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준 추진을 놓고 노사정 간 힘겨루기가 반복돼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해 문재인이 비준 추진 강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범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재계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쟁점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의 금지이다. 첫째로, 결사의 자유는 해고자 조합원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등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규정의 삭제도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는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것과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노역 등 강제노동 부과)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하급 공무원으로 제한되었던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이익단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넘어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2. 귀족 노조의 일자리 독점 사례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민주노총의 폐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입은 손실액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계를 압박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해 왔다. 오늘 날 민주노총의 일자리 독점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급하다. 민주노총의 일자리 독점은 소속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고, 조합의 자녀 및 친인척에 대한 우선 채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본 토론을 통해 민주노총의 일자리 독점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보려고 한다.

① 소속 노조원 우선 고용 강요

- 2019년 5월 소속 노조원 우선 고용을 주장하며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아 건설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채용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음.

- 5월 28일 경기지역 건설 공사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회원들은 아파트와 학교 등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와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공사현장 진·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음.

- 이들은 주로 △소속 노조원 무조건 고용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점유율을 최대한 높일 것 △추가 공사 인력 필요 시 조합원 우선 배정 등을 요구함.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집회 신고 후, 수십명이 몰려가 진·출입로를 의도적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한국일보).

②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사례:1)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를 입수했다며 연매출 2조 현대차 1차 부품 협력사 S사 회사소식지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는 내용을 공개함. 18년 6월 발행된 해당 소식지에는 올해 신규 채용에서 자녀 등 1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10명의 이름 발견, 2011~13년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도 발견됨.

- 또한 현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고,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자녀로 할 것"을 요구해 사측이 수용했다는 내용. 이 요구는 지난 2월 생산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있음. 아울러 노조가 회사에 제시한 고용세습 우선순위는 퇴직을 3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가 최우선이었고,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 조합원의 친인척과 지인, 일반청년 순이었음. 소식지에는 노조가 20명의 명단이 담긴 '화이트리스트'를 추가 작성해 후보군을 우선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음(중앙일보).

③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사례:2)

-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019년 6월 9일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선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김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일부 노조에서 단협에 노조원 자녀 '우선채

용·특별채용' 등 조항으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 등의 '우선채용·특별채용 노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 김 의원이 공개한 15개 노조 가운데 9곳은 민주노총이, 5곳은 한국노총이 상급단체임.

3. 문재인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제 파탄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제시한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18일 발간한 '2019년 6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1분기에 GDP가 전 분기 대비 0.4% 급감하면서 예기치 않게 수축했다"고 평가했다. 오늘 날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는 단순 좌파의 무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지능적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망국적 행위이다. 이들은 2020년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중산층(다이아몬드형 구조)이 붕괴하면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피라미드형 구조)이 증가하면서 표심의 외연 확대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8년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67.7%의 지지율로 재선되었듯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영구집권을 위해 국가의 경제를 계획적으로 파탄시키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진영 시국특별대토론회〉
민노총의 귀족노조, 그 실태와 대안

토론

- 김 원 식 (건국대학교 교수)
- 문 갑 식 (월간조선 부국장)

토 론 문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제17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노동시장의 문제들

○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비정규직 실직/ 신규고용 감소
- 주52시간의 임금총액 감소
-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
- 핵심근로자 계층의 수혜 확대에서 핵심근로자 수 감소(실업증가)로

○ 비정규직법의 역설

- 2년 이내 근무의 비정규직 양산

○ 노동시장의 경직성

- 근로기준법의 경직성
-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만의 보호

○ 노동조합의 사회운동기구화

- 노동조합의 기업 내부에 대한 관심 없이 정치세력화

○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및 서비스근로자들의 위기

- 자동화, 무인화, 디지털화 등
- 비정규직의 정상화

□ 노동조합의 문제들: 사라질 것인가?

○ 행동 우선에 따른 협상력 저하

- 파업의 만능주의의 한계 (삼성자동차의 경우 등)
- 노동조합(핵심 근로자) 고령화
- 신산업 청년근로자/ 여성근로자들과의 이질감

- 공공, 서비스, 금융노조의 위기
 - 가장 안정된 직장 근로자들의 기득권 지키기
 - 공공개혁 절실: 세금부담이 급증하는 국민이 원함.

- (감소하는) 정규근로자들의 협상력 상승
 - 구조조정(신규고용 억제 포함)에 따른 1인당 생산성 증가로 근로자간 양극화
 - 비정규직의 실질적 배제

- 정치권의 희생양
 - 양극화: 양극화는 빈곤의 원인이 아님. 성장의 결과임.
 - 일본의 '춘투'

- 노동운동의 세계적 쇠퇴
 - 현실과 괴리 중

- 노동조합을 위한 제언: 노동조합은 '사회적 인프라'

- 노동시장의 국제기준 준수
 - 개별노동계약 존중
 - 연공급제에서 직무급 및 능력급제로
 - 정년폐지/ 연령차별금지 강화

- 정치·사회운동에서 내부 근로자(insider) 보호로
 - 기득권 보호가 아닌 내부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및 산재 보호 강화
 - 근로자 능력개발
 - 사회보험의 적극적 대안 제시: '양극화 해소' 역행 중

- 노사협의제도의 활성화
 - 노사일체 및 공동의 이해를 위한 상호존중 환경 조성

- 합법적 경영참여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퇴직연금(우리사주 매수 허용)의 다원화

- 사농공상(士農工商)에서 상공농사(商工農士)로 인식전환
 - 노동조합의 관료(지배세력)화 지양
 - 치열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사(士)'의 역할은 없음.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이른바 ‘파워 그룹(Power Group)’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 언제부터인지 역산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부터였다. 김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했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으로 불린 서유럽 혹은 북유럽 모델이었다.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은 당시 실업자가 100만명을 훨씬 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 백수’라 불리는 인구가 200만명에 달할 때였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처임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키는 듯 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배석범씨는 노사정 대타협 직후 내부로부터 비토를 당했으며 노사정 대타협은 당연히 무산되고 말았다.

이것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노사관계에 두고두고 ‘비수’가 되고 말았다. 원래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하면 될 문제였다. 잘되면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잘못되면 회사가 망하는 결과를 낳아 노사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그 잘잘못을 판단하게 놔뒀으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게 만들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폭력적 노동세력은 노사관계에 느닷없이 정부를 개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잘못된 전통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는 마치 자신이 ‘노동변호사’라는 것을 과신해 사사건건 노사문제에 개입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측 대표 대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 ‘실적’을 의식한 정부가 기업에 양보를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런 관행은 비단 좌파 정권 뿐 아니라 우파 정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핵심이다. 현재의 문제인 정권 역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하는 김대중식 노사정 대타협을 재현하려 애쓰고 있지만 애초부터 노사정 대타협이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을 보면 한국형 노사정 대타협의 아이러니가

그대로 드러난다. 조선사업은 경기 사이클이 매우 길다. 즉 경기 하강과 상승이 다른 업종에 비해 길다는 것이다. 한국의 조선사업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세계 톱 5에 들어간다.

거의 망할 단계인 대우조선해양을 정부가 현대중공업에 떠넘기다시피 인수시킨 것은 국민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주주총회에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 외에 망하기 직전인 대우조선해양노조가 반발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노조 가운데 가장 극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노조가 개입했고 민주노총의 지역본부가 가세했다.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 참가 이유는 “같은 울산지역에 있고 형제 노조”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였다.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침묵했고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경영상의 피해를 보다 결국 주주총회장을 급하게 변경하는 ‘편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것이야말로 한국형 노사정 대타협이 얼마나 허구에 가까우며 정부가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만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지 못했다면 거의 경상남도 거제도 지역의 경제가 거덜 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런 위기상황을 모면하게 해준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는 침묵했다. 관련 부처 어디에서도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부보다 민주노총이라는 막무가내식 폭력 노조가 더 상위에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 선진국의 초입에 진입했다면 다음 과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폭력적인 노조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의 자세를 보면 그런 기대는 매우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